

연구자료 D234-10 | 2007. 12.

농업인력정책의 문제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러두기

우리 연구원은 곧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농산물 시장의 완전 개방에 대응하고 선진국 단계의 농정 방향과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년 과제로 「선진국형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 첫해인 2007년에는 현실인식과 미래방향 선택에 중점을 두며 2년차에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 할 예정이다.

1차 연도 연구에서는 각 분야의 정책의 쟁점과 변화 전망, 정책방향 설정 등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와 연구진이 진행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운영하였다. 정책분야는 소득, 농지, 인력, 기술, 농촌개발 등 10개 분야로 나누었으며, 각 토론회에서는 3~4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자료집은 “농업인력정책의 문제와 과제”를 주제로 핵심 이슈인 정예인력, 후계자, 교육 문제와 선진국 사례에 대해서 진행한 발제와 토론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집이 앞으로 진행될 관련 연구나 정책 수립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목 차

토론회 요지 3

발표 논문 13

I.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문제와 과제	박성재	13
II. 정예농업인력 육성 방안	강대구	33
III. 한국농업대학 10년의 경험과 과제	이영석	63
IV. 선진국의 농업인 재교육	나승일	99

종합 토론 123

토론회 개요

- 제 목: 농업인력정책의 문제와 과제
- 일 시: 2007. 6. 29.(금), 15:00~18:00
- 장 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관 대회의실

- 주제 발표 I: 박성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문제와 과제
- 주제 발표 II: 강대구(순천대학교 교수)
 - 정예농업인력 육성 방안
- 주제 발표 III: 이영석(한국농업대학 교수)
 - 농업전문학교 10년의 교훈과 인력의 정예화 과제
- 주제 발표 IV: 나승일(서울대학교 교수)
 - 선진국의 농업인 재교육 정책

- 지정토론
 - 사회: 박성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자: 박민선(농협대 교수)
 - 김정희(농림부 인력정책과 과장)
 - 김태용(미래회계법인 회계사)
 - 허윤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토론회 요지

- | | |
|-----------------------|---|
| 1. 농업인력 정책의 현황 | 5 |
| 2. 농업 인력정책의 이슈 | 6 |
| 3. 농업인력 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 | 8 |

토론회 요지¹

1. 농업인력 정책의 현황

-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 농업체질 강화를 위한 5대 정책의 하나로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의 중점 육성’이 들어 있다. 정책방향은 농업인 고령화에 대비하여 신규 정예농업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정예농업인력의 확보를 위해 매년 4,500여명 정도의 신규유입이 필요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 신규인력 육성은 신규 창업농 집중 육성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후계농업인 제도를 개편하여 창업농 위주로 전환하고, 한국농업전문학교를 창업농 양성 전문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하며, 농협, 유통공사, 대학 등에 「농산물 유통전문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하기로 하였다. 농업인 교육은 집합식 교육에서 현장밀착형 컨설팅 위주로 전환하고 경영실태 평가를 통해 우수 농가를 선별·지원하기로 하였다. 농업·농촌종합대책에 의거하여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력 육성 정책 및 사업을 열거해 보면 우선 정예인력육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농업전문학교 개편, 농업인 교육훈련,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유통전문인력 양성,

1 위 글은 “농업인력정책의 문제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의 발제논문 및 토론을 요약한 것임

농업벤처 육성, 농업경영체 활성화가 있다.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정책추진기반 확충과 정책별 성별 영향 분석 평가제도의 도입이 있다.

2. 농업 인력정책의 이슈

- 후계인력 부족문제가 우선한다. 경영규모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정책목표로 설정한 농가의 숫자(2013년 20만 전업농)를 달성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농가들이 과연 현재 기대하는 수준의 농가, 즉 완전개방 하에서 국제경쟁력을 갖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 경쟁의 무대에서 필요로 하는 경영의식과 능력, 기술수준을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의 지원정책(경영컨설팅, 금융지원, 교육 등)은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은 지금방식이 유효한지 그리고 각종 연수교육, 기술교육, 전문교육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후계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들의 지원수준이 적절한지 그리고 현재의 인력정책 방향과 다른 농업정책 간에 상충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농업구조정책에서 정예인력에 의한 농업경영의 규모화를 지향하는 부분과 후계인력의 확보 부분은 양쪽의 목표를 동시에 고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영농후계자의 자금지원도 종합자금에 포함한 것과 같은 경우처럼 농지제도, 농업금융 시스템, 농업관련 규제와 법 등이 신규인력의 농업부문 진출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 우리 농정은 UR 이후 전업농 중심의 구조농정을 펴왔다. 국민의 정부 시

절 가족농 중심 정책의 논의가 있었지만 중소농에게 혜택이 더 가는 정책을 시행했다고는 할 수 없다. 정책의 화두는 늘 ‘선택과 집중’으로 표현되었으며 현재도 각종 사업의 중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를 지원하는 데가 있다. 앞으로 더더욱 선택된 소수 농가의 농업생산 점유율이 증가할 것이고 소수의 대규모 전업농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가는 농외소득에 의존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 시장환경의 변화와 기술진보 등에 따라 농업도 자본집약적 경영으로 변모하고 경영관리 능력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족농적 경영체보다는 회사형태의 경영체가 더 적합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가족경영보다 법인경영은 경영관리능력, 자본조달, 시장대응 능력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협동조합에 의한 법인조직의 결성은 법인의 규모화, 노령·영세농의 문제 해결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나투어영농조합법인, 순천조합의 농지임대에 의한 마을단위 영농의 시도 등도 새로운 형태로 관심을 끌고 있다.

- 영세소농 구조의 한계를 개별 농가 차원의 규모화 등의 성장전략으로 극복하는 것보다는 농가들의 조직화, 농가와 협동조합, 관련기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시스템의 구축으로 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중요 과제이다. 생산비의 절대적 비중이 높은 사료산업 기반과 소비지 시장의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덴마크 양돈을 이길 수 없는 것은 덴마크의 협동조합 중심으로 구축된 가치사슬(Value Chain) 때문이라고 한다. 과거의 법인화 정책은 규모화와 비용절감으로 통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현재의 법인화는 소비자의 니즈(needs)를 파악하여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생산자의 조직화, 관리, 통제 가능한 능력을 갖추는 생산조직인 것이다.

3. 농업인력 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

-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농업후계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신규 농업인력의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 그리고 이들과 농업자원을 매칭해 주기 위한 노력들(은퇴나 자원순환의 원활화)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재교육을 통해 농업인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필수불가결하다.
- 인력정책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성장단계별 수요자 맞춤형 농업인 육성 로드맵 및 추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농업인력의 진입, 퇴출 등 중장기적 농가인구의 정확한 변동 예측을 통해 신규농업인력, 중견농업인력, 선진농업인력 등 단계적 농업인력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육성정책 방향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관에서 주도하는 경우 우려되는 교육프로그램의 경직성이나 책임소재의 모호함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현장밀착형 농업교육훈련으로의 개편을 촉진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의 교육훈련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 유럽 선진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의 주체를 민영화함으로써 지역 및 품목별 영농현장에서 요구되는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적시에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
- 시스템적으로 농업인 교육훈련 정책 수립·추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부부처 내에 교육훈련 전문인력의 확보·배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예산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의 질과 책무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시 교육훈련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포함한 농업인 교육훈련 전문가 양성, 농업인 육성 정책 개선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설립을 통해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및 공공·민간 기관의 농업교육훈련 사업과 농촌진흥청의 지도사업 등 농업인력개발 행정체계의 일원화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훈련과 지도사업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훈련·연구·지도가 연계 또는 통합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농업인의 프로화를 촉진하는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농업경영체와 지원기관, 제도가 인센티브 관례로 맺어져야 한다.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성과에 따라 이루어지되 농업소득세의 시행으로 지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산업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한다는 사회적 자부심을 높인다. 현장수요에 맞춘 기술개발, 현장기술의 혁신과 연계한 기술개발자의 보상 등으로 수요중심, 현장중심의 지원체재를 구축하도록 한다.
- 신규농업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가족, 배우자까지 함께 고려하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 그리고 이를 위한 농업인 교육과정 이수 이력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주업농, 겸업농, 부업농을 구분하여 교육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정도를 차별화한다. 특히 겸·부업농이나 그들의 배우자 등이 농촌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담당하는데 필요한 교육(예를 들면 노인 보살피기, 방과후 교육 등)을 통해 농업인과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돕는다.
- 개인의 상황에 맞춘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별, 작목별, 조직성격 등에 맞춘 교육이 개발,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 참여 동기 부여 및 피교육자의 동질화로 교육성과의 제고를 기대한다. 영농조합과 같은 조직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산지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개인들 간의 자원, 정보

교류를 통해 조직화도 촉진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정책을 정밀하게 제도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지원체제의 구축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역 전문농업인의 선발은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일본의 전문경영주선발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따라 인력정책의 통한 지원에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사과단지를 육성하기 위한 후계농업인과 화훼단지 육성을 위한 후계농업인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르다. 이를 통해 자격여건을 강화하여 창업후계자 선발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 경영체별 DB를 구축하여 정책의 단위를 개별경영체로 낮춘다. 개별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한다. 형평성에 따른 지원정책이 아니라 미국의 영농신용법처럼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성과에 따라 지원여부와 지원정도를 정한다.
- 교육전문가 육성 그리고 교육컨텐츠 개발의 노력을 가속화 해 나가야 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질 있는 전문가와 좋은 교재가 선결조건이다. 만약 자체 개발이 어렵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 대기업의 좋은 교육 시설과 교육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인력이나 시설 측면에서 인프라가 부족한 민간단체 교육이 대기업의 노하우와 콘텐츠, 시설들을 사용함으로써 대기업 차원에서는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는 기회도 주고 농업인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전문성 확보를 도모한다.
- 농업자원의 순조로운 순환을 위한 정교한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유럽의 경우 농장 인수인계를 위한 도제 프로그램이 있어서 후계인력이 은퇴예정인 농가의 농장에서 일정기간 수련과정을 거치고 경영이량을 받은 후 아주 장기적인 대출로 상환하며 은퇴 농가는 자신이 소유였

던 농장을 통해 역모기지 형태로 생활비를 마련한다. 일본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리스사업이 있어서 선발된 신규농업인에 대해 지자체가 시설이나 농지를 5년간 임대해 주고 추후 성과여부에 따라 임대한 농장을 매각하여 정예인력이 농업자원을 인수하도록 한다.

- 현재의 중심 농업인력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요로 하는 경영의식과 기술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과학적인 경영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고 시장과 소비자에 맞춘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문농업인을 만드는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요약 및 정리: 정호근(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문제와 과제

— 박 성 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문제제기	15
2. 농업인력 육성 정책의 현황과 문제	16
3. 선진국의 정책	21
4. 정책과제	25
참고 문헌	32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문제와 과제

1. 문제 제기

- 인력 정책의 방향은 젊고 유능한 후계인력의 양성, 경영능력과 의식을 갖춘 전문농업인의 양성, 전통적 가족경영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경영체의 육성, 농업생산자의 조직화, 농업교육의 강화로 집약된다.
 - 새로운 경영체에 대한 논의는 UR 이후 농업법인 육성 정책에서, 그리고 생산자의 조직화는 영세소농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시스템의 구축 및 강화(협동조합, 클러스터 등)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 우리 농정의 성과에 대해서 비판적 평가가 지배적이듯이 농업인력정책에 대해서도 평가는 좋지 않다.
 - 1980년대 초부터 시행해온 후계자 육성사업, UR 이후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전업농육성 등 농업인 정예화사업은 양적인 면에서는 성과를 인정받고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부정적이다.
 - 후계자 확보농가는 2000년에 11%에서 2005년엔 4% 수준으로 낮아졌다.

- 농업인력 육성과 전문화를 위해 재정·금융적 지원과 교육, 컨설팅, 정보지원 등의 정책수단이 동원되었고 지원수준을 높여 왔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 영농후계자에게 지원되는 수준은 얼마나 되어야 충분한 것이 될 것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

- 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이 보다 수요자의 관점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 가장 중요한 현장 기술지도 기관인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데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 세계화가 급진전되고 경쟁은 날로 격화되는데 자원이 극히 영세한 우리 농업인은 조직화, 경영전문화, 위험관리에 대한 관심이 극히 낮는데 이를 반전시킬 방법은 없는 것인가?
- 우리 농업의 선진화를 위해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인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화두로 후계농업인, 전문농업인, 경영체와 조직화, 교육문제를 선정하였다.

2. 농업인력 육성 정책의 현황과 문제

2.1.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인력 육성 정책

-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 농업체질 강화를 위한 5대 정책의 하나로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의 중점 육성’이 들어 있다.
- 정책방향은 농업인 고령화에 대비하여 신규 정예농업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 신규 정예농업인력은 매년 4,500여명의 유입이 필요한 것으로 설정
- 신규인력 육성은 신규 창업농 집중 육성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후계농업인

제도를 개편하여 창업농 위주로 전환하고, 한국농업전문학교를 창업농 양성 전문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하며, 농협, 유통공사, 대학 등에 「농산물 유통전문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하기로 하였다.

- 농업인 교육은 집합식 교육에서 현장밀착형 컨설팅 위주로 전환하고 경영 실태 평가를 통해 우수 농가를 선별·지원하기로 하였다.

2.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지도하고, 신규창업 및 경영개선을 지원하여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선정한 자 중에서 35세 미만이면서 영농경력 5년 미만은 창업농후계농업인, 45세 미만이면서 영농경력 10년 미만은 신규후계농업경영인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은 20~120백만원을 차등지원하고 농업전문학교 출신은 최고 2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 신규후계농업경영인은 20~50백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15년)에 연리 3%로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도 같다.
- 2007년도 사업계획은 창업농지원 1,000명, 신규후계농업인 지원 400명 등 모두 1,400명에게 83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2004년까지 모두 123,329명을 지원했고, 2005~2006년은 각기 1,000명씩 지원했으나 2007년부터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 창업농후계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3주 또는 9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후계농업인은 1~2일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표 1. 농업·농촌종합대책의 농업인력 육성 정책 및 사업

시책	사업	비고
1. 정예인력 육성	1.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창업농후견인제도('05) · 사업성과에 따른 추가 지원 · 대학생 창업연수('05) · 농업인턴제('05)
	1.2. 농업전문학교 개편	· 학제 개편(3+1년제) · 직업훈련과정 신설 · 조직개편(한국농업대학 등)
	1.3. 농업인 교육훈련	·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연간 1,000명의 신규 창업농 육성 · 교육훈련 바우처 제도 도입 · 수요자에 맞춘 교육훈련
	1.4.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5. 유통전문인력 양성	
	1.6. 농업벤처 육성	
	1.7. 농업경영체 활성화	· 세제 개선 · 농업회사법인 진입제한 완화 · 지원제도 정비
2. 여성농업인 육성	2.1. 정책 추진기반 구축	· 1차 5개년 계획 중간평가 및 2차('06~'10)계획 수립
	2.2.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제도 도입	

2.3. 농업인턴제

- 잠재농업인력의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통한 영농정착 동기를 부여하여 신규인력의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하였다.

- 만 18~44세의 미취업자 또는 농업계 고등학교 3학년, 농업계 대학 재학생 중에서 선정하여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 우수 전문농업경영체에서 24개월 이내의 현장실습 수행한다.
- 농업인턴에 대한 월보수는 60만원을 한도로 하여 정부가 50% 이내에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다.
 - 인턴 채용 농가는 정부 지원금 이상의 월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 2005년부터 시작되어 연간 100명씩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300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2.4. 창업농후견인제

- 창업농 후계농업인의 영농시 문제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영농 정착과 경영혁신을 유도하여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다.
- 2005년부터 매년 100명씩 선발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3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후견인 자격은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농업법인 등 우수 전문농업경영체, 농업계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한다.
- 창업농은 후견인을 통해 기술·경영·정서적 측면에 대한 조언·교육·지도 등을 제공받으며, 후견인에 대해서는 창업농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한다.

2.5.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미래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 및 유지에 기여코자 한다.
- 선정후 5년 이상 경과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이 지원을 신청한 경우 평가를 통해 1인당 8천만원까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15년)의 자금을 연리 3%로 지원 가능하다.
- 한농연에서 기초평가를 실시하여 시·군에 추천을 하면 시·군단위 실무협의회 → 시·군단위 심사위원회 → 도단위 심사위원회 → 농림부가 대상자 승인의 과정을 거쳐 지원한다.
- 2006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으로 매년 1,500명 단위로 1,2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며, 2009년까지는 같은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2.6. 농업경영컨설팅지원

-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총 3,516개소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했고, 2005년 이후에는 연간 약 1,000개소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가 중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농가와 업체간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보조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은 3년 동안 지속적 지원이 가능하며 1·2년차는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를 적용하고 3년차에는 국고 40%, 지방비 10%, 자부담 50%로 한다.

- 지원단가는 개별농가 8백만원, 법인·업체는 10백만원, 공동마케팅조직·산지전문유통조직·APC·RPC는 30백만원 이내로 한다.

3. 선진국의 정책

3.1. 일본

신규인력 확보

- 일본은 신규인력 확보사업으로 신규 영농취농사업과 영농후계자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신규취농자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금융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대상도 18~55세로 연령의 폭이 넓다(강대구 외 2004 참조).
 - 지사의 허가가 있다면 인정취농자의 지원은 65세까지 가능함.
 - 농업연수, 취농준비, 시설 및 농지구입, 경영자금, 구조개선 촉진자금 등의 다양한 각도에서 지원하고 이 중 상당수는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여 우리와 비교하여 지원종류 및 수준이 높다.
- 농업후계자 육성사업은 학교교육을 근간으로 하여 개인의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후계자의 선정과정은 ?

전문농업인

- 농업경영개선계획의 인정제도: 도도부현의 기본방침(10년 계획), 시정촌의 기본구상(10년 계획)에 기초하여 농업인 스스로가 세운 농업경영개선계획(5개년 계획)을 인정받으면 지원한다.
- 농업생산법인을 중시하고 활성화를 위해 설립요건 등 규제를 완화했다.
 - 사업영역에 농업생산, 농작업 수위탁, 가공, 저장, 운반, 판매, 농업관련 사업으로 확장
 - 농사조합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력에 의존한 농가 조합원의 경영참가는 1/5로 제한에서 4/5로 완화시킴으로서 법인전문가, 농산물의 주요고객, 농작업 위탁자 등 거래상대방의 경영참여 유도
- 농업경영이 우수하고 농촌청년 육성에 지도 역할을 하는 농업인의 사회적 평가를 높이고 농촌청년 육성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농업사 자격을 부여한다.

3.2. 미국

- 미국은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상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가 없는 농가로 한정하는데, 후계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원한다.
 - 지원방식은 정부의 직접대출과 신용보증 방식으로 나뉜다.
- 영농후계자와 목장주에게 영농설비의 대여 혹은 손쉬운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 이용의 편의 도모한다.
- 지원자격을 얻기까지에는 최소 5년의 영농에 필요한 교육과 경험을 쌓아야 한다.
- 영농후계자, 농장주 지원법률은 혈연이나 결혼관계로 맺은 소유주와 구성

- 원, 5년 이상의 영농종사자와 그 구성원인 농가를 지원한다.
- 5년간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3.3. 프랑스

- 영농정착지원금(DJA) 제도를 통해 후계자 양성을 도모하는데, 정착보조금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영농시설 구입을 위한 중기특별금융(MTS)과 추가금융자금을 지원한다.
 - 정착 후 3년이 지나면서부터는 당초 계획한 수준의 농업소득 실현해야 하며
 - 부부가 공동으로 영농을 희망할 경우는 서로 독립적인 경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며, 조건불리지역에는 지원수준을 차등지원한다.
- 지원대상자는 21~35세로서 농업전문대학(BTA)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6개월 이상의 현장실습 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
 - 보조금 82천 프랑(약 1,394만원)을 정착시 50%, 3년 경과 후 50%를 지급하며
 - 융자금은 최대 65만 프랑(연 3.8%, 12년 상환)이나 시설 등을 선 구매 후 영수증을 은행에 제시하고 융자를 받으므로 우리보다 엄격하다.
-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도지사가 선정하고 자금지원여부는 도의 농업경영구조개선위원회(ADASEA)에서 선발한다.
- 학교교육 이수 등의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도 농사를 지을수는 있지만 정책자금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3.4. 기타

- 덴마크는 직업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30주 이상의 실습기간을 거쳐야 하며, 이 중 최소 6개월은 축산농가에서, 다음 6개월은 작물재배농가에서,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그 밖의 농업분야에서 실습해야 한다(박문호, 2003).

- 덴마크는 농업경영인으로서 특정 노동의 기술자로서의 자격을 공적으로 부여하여 기술의 전문성과 효과적 분업화를 통한 전체 시스템적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 농지매입(30ha 이상), 영농자금 대출, 선도농 지원 후원금 수령 등을 위해서는 그린카드(농업경영인 및 지도자 자격증)가 있어야 한다.
 - 거름 및 약제 살포 면허증, 돼지 수송차량 운전자격증 등 농업 생산·유통·가공 등 전분야의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의 전문화를 유도한다.

- 네덜란드, 영국 등 EU 국가들은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정부 직접지원에서 민간 또는 단체지원의 간접지원으로 전환하고 지도서비스를 유료화하고 있다(박문호, 2003).

- 네덜란드는 농업교육기관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합병 및 특화시키고 예산투자는 확대하였으며, 현장과 연계된 농업교육, 선택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역중심의 교육,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마상진, 2007).

3.5. 시사점

- 일본을 제외하고는 영농후계자나 기존 농가에 대한 지원이 우리보다 다양하고 지원수준이 확실히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자격은 분명하고 농가의 이행 상태를 보아가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농가의 자립을 독려하는 또 다른 정책의 하나로 보아도 될 것이다.
 - 무조건적 지원은 정책목적과는 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유럽국가에서 보듯이 교육서비스의 유료화는 반드시 재정부담 완화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데도 작용한다.
-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농업의 분업화, 부분 기술의 전문화,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각 경제주체간의 기능 연결 및 부가가치 창출의 가치사슬의 구축과도 관련이 있다.
- 그러나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은 선진국들은 스스로 자신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의 사정을 안다면 무엇이라고 할 것인지 궁금하다.

4. 정책과제

4.1. 후계인력

- 후계인력 부족이 심화되어 문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2005년 센서스에서 후계자가 있다는 농가는 3.5%에 불과하였다.

- 신규진입농가는 연간 1만호 수준이나 노령농가의 비중이 높다.
 - 농업센서스에 의하면 1995~2000년에 55,128호, 2000~2005년에 49,840호가 신규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 새로 진입한 농가도 청장년층은 급격히 줄고 노령층은 크게 늘었다(표2).
- 젊은 인력의 신규진입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후계자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 김정호 외(2005)는 2015년에는 20~30대 농업경영주는 2천여명에 그칠 것으로 추정하였다.
- 농업·농촌종합대책이 상정하는 2014년 20만 전업농 육성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약 4,500명 정도의 신규유입이 필요하다는데(김정호 외, 2005), 2000~05년에 40대 이하 경영주의 신규진입은 연간 4,426명 이었다.
- 후계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현재의 정책 프로그램들은 적절한 것이며 지원수준은 적정한가?

표 2. 경영주 연령별 영농경력 5년 미만 농가의 분포

단위: 호

	2000	2005	2005/2000
30세 미만	2,928	1,024	0.350
30대	13,181	6,879	0.522
40대	14,267	14,226	0.997
50대	12,766	14,543	1.139
60대	9,973	10,461	1.049
70세 이상	2,013	2,707	1.345
계	55,128	49,840	0.904

자료: 통계청, 농업센서스 2000, 2005

- 호당 지원수준을 올리고 농업인턴, 후견인제도, 벤처펀드 등의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의 효과는?
 - 앞으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경우 어느 정도의 인력을 확보하면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것인가?
- 현재의 인력정책 방향은 다른 농업정책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정책목적 간에 서로 방향이 다른 측면은 없으며 보완적으로 추진해야될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 농업구조정책은 정예인력에 의한 농업경영의 규모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 관점에서 본다면 후계인력의 확보목표는 너무 높은 것은 아닌가?
 - 농지제도, 농업금융 시스템, 농업관련 규제와 법 등이 신규인력의 농업 부문 진출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는 없는 것인가? (예: 과거 영농후계자의 자금지원도 종합자금에 포함한 것과 같은 경우)
 - 지금까지 우리는 지나치게 농업에 대해 비관적이고, 정책에 대한 비관적 태도 때문에 생존력 있는 후계자 육성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 다른 나라에서 취하는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4.2. 전업농 육성

- 우리 농정은 UR 이후 전업농 중심의 구조농정을 펴왔다.
- 국민의 정부 시에 가족농 중심 정책 논의가 있었지만 중소농에게 혜택이 더 가는 정책을 시행했다고 할 수 없다.
 - 정책의 화두는 늘 '선택과 집중'으로 표현되었으며 현재도 각종 사업의 중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를 지원하는데 가 있다.

- 앞으로 선택된 소수 농가의 농업생산 점유는 크게 증가할 것이고 대부분의 농가는 농외소득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표 3 참조).
- 경영규모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정책목표로 설정한 농가의 숫자(예: 2013년 20만 전업농)를 달성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지 모른다.
 - 전업농은 농업소득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정도의 농가를 의미하고 있다.
- 그러나 이 농가들이 과연 현재 기대하는 수준의 농가, 즉 완전개방하에서 국제경쟁력을 갖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표 3. 영농유형별 대규모 영농의 생산비중 변화 전망

단위: %

논	2005		2030	
	호수	면적	호수	면적
논 3ha 이상	4.9	26.4	20.1	49.4
밭 2ha 이상	3.9	30.0	9.6	55.3
과수 1ha 이상	14.6	45.8	17.4	53.1
시설원예 2000평 이상	9.6	52.9	4.0	61.7
한우 30두 이상	6.9	46.9	24.3	62.6
낙농 50두 이상	49.9	71.6	92.4	97.8
양돈 1,000두 이상	24.0	77.9	58.0	96.2
양계 30,000수 이상	1.1	73.7	3.8	92.6

자료: 김정호 외, 『농업부문 비전 2030 중장기 지표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부록 114~116쪽 표에서 발췌 정리

- 세계 경쟁의 무대에서 필요로 하는 경영의식과 능력, 기술수준을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의 지원정책(경영컨설팅, 금융지원, 교육 등)은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은 지금방식이 유효할 것인가?
 - 끊임없이 요구하는 부채대책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정부의존적 의식과 시혜적인 정책은 약인가 독인가?
 - 각종 연수교육, 기술교육, 전문교육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가?

4.3. 새로운 경영체 육성

- 시장환경의 변화와 기술진보 등에 따라 농업도 자본집약적 경영으로 변모하고 경영관리 능력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족농적 경영체보다는 회사형태의 경영체가 더 적합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 가족경영보다 법인경영은 경영관리능력, 자본조달, 시장대응 능력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 농업법인 등의 회사형태의 경영체는 주로 개별농업인의 결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협동조합 중심의 조직이 출현하고 있다.
 - 협동조합에 의한 법인조직의 결성은 법인의 규모화, 노령·영세농의 문제 해결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 나투어영농조합법인, 순천조합의 마을영농의 시도 등도 새로운 형태로 관심을 끌고 있다.
- 영세소농 구조의 한계를 개별 농가 차원의 규모화 등의 성장전략으로 극복하는 것보다는 농가들의 조직화, 농가와 협동조합, 관련기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시스템의 구축으로 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중요 과제이다.

- 생산비의 절대적 비중이 높은 사료산업 기반과 소비지 시장의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덴마크 양돈을 이길 수 없는 것은 덴마크의 협동조합 중심으로 구축된 가치사슬(Value Chain) 때문이라고 한다.
- 과거의 법인화 정책은 규모화와 비용절감으로 통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현재의 법인화는 소비자의 니즈(needs)를 파악하여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생산자의 조직화, 관리, 통제 가능한 능력을 갖추는 생산조직인 것이다.

○ 우리의 정책은 조직화 차원에서 얼마나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가?

4.4. 농업인력 양성 및 지원제도

- 농업인력의 양성은 교육과 자금지원, 사회적 우대 등 지원제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 교육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 구분되며, 양쪽 모두 예비농업인 양성과 기존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조, 융자 등의 자금지원, 경영컨설팅, 후견인의 지정으로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 학교교육은 농업계 고교, 전문대학, 대학이 있고 사회교육기관으로는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민간단체(전국귀농운동본부, 도드람양돈연수원 등)이 있다.
- 교육인력은 연간 130만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어 외형상 매우 활발하고 다양한 교육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농림부 45천, 관련기관 및 단체 36천, 진흥청 산하기관 1,220천 등(강대구, 2004)

-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는 교육은 형식적 교육, 전문성 부족, 부적합한 교육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각종 지원제도와 수준은 수요자의 만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 마상진 외(2005)는 농업인 교육의 문제로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미흡, 담당 인력 부족, 프로그램별 목표 설정 및 내용선정 미흡, 교육기관의 홍보 애로, 교육 훈련의 조건·내용 등이 수요와 거리가 있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부족으로 지적하였다.

참고 문헌

- 장대구 외. 「농업인력 구조변화에 따른 정예농업인력 육성방안 연구」. 2004. 농림부.
- 김경덕, 「농촌·농가인구 및 농업노동력 증장기 전망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 김영생, 김정호. 「농업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혁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 김정호 외. 「기업농의 가능성과 조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 김정호, 마상진. 「신규 취농의 실태와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 마상진. 「농업강국 네덜란드의 농업교육」. 해외농업시리즈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 마상진, 김영생, 「농업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 박문호. 「농업인 민간위탁 교육·훈련의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 이정환. 「농업의 구조전환 그 시작과 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8.

정예농업인력의 육성 방안

- 강 대 구 (순천대학교 교수)

1. 서론	35
2. 정예 농업 인력의 개념 규정	36
3. 정예 농업 인력의 수요	40
4. 정예농업인력의 공급	43
5. 정예농업인력 육성 방향	53
참고 문헌	61

정예농업인력의 육성 방안

1. 서론

- 농업인력육성에 대한 관심은 영농후계자의 감소에 따른 1980년대의 사회적 문제제기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초기에는 영농후계인력, 영농후계인력을 중심으로 논의되었고, 최근에 논의된 농업 인력이라는 용어 역시 농산업분야 전반에 필요한 인력을 논의하기보다는 농업생산에 종사할 농업생산직 종사자의 인력 확보라는 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 농업 인력에 대한 좁은 인식은 농업을 ‘재배와 사육업’으로 극히 제한된 것으로 파악하는 전통적 관점의 농업으로 인식함에 있으며, 이는 농림부의 관점에서조차 파악될 수 있다.
- 그러나 농업은 ‘토지의 생산력을 이용한 식물과 동물의 경제적 생산’만이 아닌 다양한 관련 산업의 토대가 되고 있고, 다른 분야와 결합한 농업 분야가 나타나므로, 과거와 같이 농업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농산물의 생산과정과 전후방으로 관련된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 농업생산투입요소와 관련된 농업생산자재와 농기계, 시설, 생산기반 정비와, 농업금융, 교육, 지도, 연구 등의 다양한 지원 분야까지 농업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들 부분에 대한 인력 육성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시설 농업이나 사이버 농업 등의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농업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정예농업인력의 육성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정예 농업 인력의 개념 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농산업의 발전 방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결과적으로 정예농업인력 육성 방안의 논의는 농업 인력은 어떤 사람인가와 얼마나 필요한가의 논의²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이는 농업인력의 개념 규정과 인력의 수요 규모부터 논의될 수 있다.

2. 정예 농업 인력의 개념 규정

- 농업 인력에 대한 개념 규정은 학자나 연구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직업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직업으로서 농업 인력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와 산업으로서 농업은 어떠한 부분인가의 논의이다. 산업은 ‘생산을 하는 사업’이고 사업은 ‘일정한 목적과 계획 밑에서 경영하는 경제활동’(한컴사전, 2005)이며, 네이버 국어사전(<http://krdic.naver.com/>)에 따르면, “인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생산적 기업이나 조직”으로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이나 조직을 말한다. 그러므로 농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으로서, 목적은 “인간 생활에 필요한 식물이나 유용한 동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산업 또는 그런 직업”으로서 인간에 필요한 식물과 동물의 생산이 목적이 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농업은 ‘경제활동’이고 ‘목적’과 ‘계획’이 기본적인 요

2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강대구, 정철영, 이종상(2004, p.11-12)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정예농업인력을 농업의 범주가 확대됨으로 농업생산에 참여하는 인력 이외의 가공과 저장, 유통, 교육과 행정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확대하고 있다.

소가 된다. 이때 농업은 직업과 산업의 의미를 모두 가지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 직업으로서 농업의 의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네이버 국어사전)로 직업을 정의하므로 직업으로서 농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인간생활에 필요한 식물과 동물을 생산하는 일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식물과 동물을 생산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농업직을 규정할 때 관련 직업이 있으므로 이들 외의 분야까지로 규정되어야 함. Hoover는 (1977) 농업생산직과 비농장직(非農場職)으로 구분하였으며, 비농장직으로서 농업자재직, 농업기계직, 농산물직(가축, 과일, 야채, 곡물, 기타 등), 장식원예직, 농업자원보전, 야생생물, 휴양직, 임업직, 농업전문직 등을 예시하였다. 정철영(1996) 역시 농직업을 농업생산직(식물생산직, 동물생산직, 농업생산일반직), 농산가공직(작물가공직, 임산물가공직, 원예가공직, 축산물가공직, 기타농산물가공직), 농자재제조 및 기반조성직(농자재제조직, 농업기반조성직), 농업서비스직(농업기술서비스직, 농업일반행정사무직, 농업유통직, 농업환경직)으로 대별하여 세분하고 있다. 또한 Hoover는 농업직을 ‘농업교과의 지식과 기술에 관련된 직업’을 의미하며 ‘농업교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첫째, 이 직업은 농산물의 생산, 가공, 분배의 기능과 그에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하며, 둘째, 이 직업은 식물학, 토양학, 동물학, 농가관리, 농업기계, 농업지도력의 주요 영역에서 한가지 이상의 능력을 요구한다(1977, p.20)고 하였다. 그러므로 ‘농직업은 농산물의 생산, 가공, 분배의 기능을 포함하고, 식물, 동물, 토양, 농가관리, 농업기계, 농업지도력의 능력을 하나 이상 요구하는 직업’으로 규정될 것이다.
- 농업인력의 개념 규정 역시 산업으로서 농업과 직업으로서의 농업을 모

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식물과 동물의 생산과 관련된 산업 범주에서 농업직업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산업으로서의 농업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확대되고 있으므로 상당부분의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과거에는 농산물의 생산은 직접적 생산 부분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고 인구가 늘면서 가공이나 저장산업이 발달하였고,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자재와 기계등이 사용되었으며, 유통이나 가공산업이 발달하여 농업과 관련을 맺게 됨으로 이들을 분명하게 농업이 아니라고 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공업’이라는 용어가 현재 사회적으로 널리 쓰이나, 우리나라에선 ‘광공업’으로 초기에 쓰이다가 광업이 없어지면서 ‘공업’으로 대체된 형태이다. 공업의 정의가 ‘원료를 가공하여 그 성질과 형상을 변경하며 혹은 정제(精製)하는 생산업의 부문’(한컴사전, 2005)이므로 원료를 가공하여 성질과 형상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가공해서 완전히 성질이 바뀐 부분은 공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형상이 바뀌었으나 성질은 그대로이거나, 반대로 성질은 바뀌었으나 형상은 그대로인 것은 이들의 정의와는 거리가 있다. 그러므로 관련 산업을 포함한 즉 농업생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전후방산업의 범위에서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파악하여야 함을 말한다.

- 정예농업인력은 우수하고 골라뽑은 농업 인력이라는 의미가 존재한다(강대구, 정철영, 이종상, 2004, p.7). 즉 ‘전문적인 교육, 충분한 영농기술, 일정한 영농기반,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역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자’(민승규, 1997, p.7- 12)로 규정되기도 한다. 유사한 용어는 ‘전문 인력’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여 농업으로 하여금 완전한 직업이 되며, 농업기술개발과 농업생산가공 및 유통 활동을 통하여 생활기반을 다져야 할 인력’(정명채, 민상기, 이영대, 1991, p.8)으로 규정하여 ‘농업직업인으로서 농업기술개발, 생산가공, 유통 활동의 영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전업농이라는 용어와 유사한데,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농업인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

의 농지와 농업노동력을 보유한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농업분야의 인력이 감소됨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농업생산과 관련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를 전제하고 있음을 말한다. 장태평은(2005, p.58) '농업생산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향후 전업농, 선도농으로 성장하여,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상회하는 농업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태평의 정의는 농업생산직으로 제한되기는 하였으나 향후 발전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정예농업인력은 정철영이나 Hoover의 분류처럼 식물이나 동물의 생산을 담당하거나, 농산물의 가공, 농업생산자재의 제조와 판매 및 유통, 농업생산기반의 정비와 조성, 농업관련서비스의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교육수료, 전문능력의 보유, 성장가능성으로 규정될 수 있다.

- 정예농업인력은 두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농업직 입직의 조건으로서 정예농업인력을 규정하는가와 최종적인 인력 육성의 지향점으로서 규정하는가의 문제이다. 민승규는 농업인 후계자의 육성 방향으로 설정하여 농업직 입직 조건이라기 보다 농업인력의 발전 방향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민승규의 논의는 농업생산인력에 국한되었고, 일정이상의 생산규모 소유, 지역농업의 선도자라는 관점을 포함하여 생산기반, 영농능력, 전문교육의 요소를 전제로서 설정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정명채, 민상기, 이영대(1991)는 입직조건으로 전문인력을 규정하고 있다. 장태평의 정의는 농업전업자로서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어서 입직조건과 육성목표로서의 두가지 관점을 함께 가지고 있으나 입직조건에 관점에 보다 가까운 형태이다. 강대구, 정철영, 이종상의 연구(2004)에서도 '농업부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본을 갖추고 있으며,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사를 가진 인력'으로 정의하였고, 실제적으로 생산농업부문에 투입되어 농업부문의 발전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선도적 농업인이나 법인으로 규정하여 능력, 자본, 의사를 규정하였고, '성장가능성'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입직 조건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 육성목표로 정예농업인력을 설정하는가와 입직조건으로 규정하는가에 따라 관심이 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육성목표로서는 정예농업인력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육성정책이 중심과제가 될 것이고, 입직조건으로 규정한다면 선발방법과 정책의 정비에 초점을 두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농업인력정책은 육성정책의 방향으로 ‘정예농업인력’을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양성, 유입, 성장, 성숙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정책은 유입단계의 교육지원과, 성장단계의 전문교육, 성숙단계의 컨설팅 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유입단계의 지원은 현재 20만호의 정예농업인력육성 방침에 따라 신규인력 45천호(10년간), 대체인력 51천호(10년간)을 위하여 농업인턴제(100명), 대학생창업연수(200명), 농대생영농정착과정(530명)운영으로 830명과 직업훈련과정(60명)으로 890명을 2007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외에 농고현장체험과정으로 10개농고에서 5,200명을 계획하고 있다.

3. 정예 농업 인력의 수요

- 정예농업인력의 수요의 추정은 농업교육 부분의 대비 방향을 결정할 때 중요한 부분이 된다. 지금까지 수요추정은 농업인구부분에 대한 추정으로서 강순희 등(2000), 김경덕(1998, 2005), 장창원(1998)의 연구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들은 학자에 따라 인력 예측의 구체적 수치가 다르다. 김경덕(1998)은 농가인구추정과 경제성장률을 기초로 수도작 종사자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고, 지역인구와 농가인구의 관계를 추정하면서 인구변화 요인을 논의한 김경덕(2005)은 지역농가인구가 지역인구에 영향받고 있으며 지역유형별로 농가의 지역인구에 대한 반응이 상이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지역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의 농가인구는 완만하게 증가하나 지역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농가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함으로 지역

인구의 유지가 농가인구유지의 필요조건으로 판단하였으며, 특히 농가인구의 감소는 농가구원의 이촌이 아닌 해당농가의 소멸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가인구가 2010년에는 2375천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년인구가 3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순희 등은(2000) 산업별 분류에서 농림어업종사자수를 2010년에 2,001천명으로 추정하고, 대분류와 중분류에 따라 농업분야 인력을 추정하였는데, 대분류에 따라서는 1,917천명, 중분류로는 출하목적의 농림어업근로자 1,915천명, 자급농어업근로자 1천명, 농림어업단순근로자 97천명으로 201만 5천명이었다. 장창원 등(1998)은 산업별, 직업별 인구를 추정하였는데, 2010년 농업종사인구를 1,201천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들 추정이 농업부문의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의 관점이 아닌 얼마나 될 것인가의 경향 분석에 치중하고 있으며, 대부분 농업생산인력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이다. 미래의 추정은 어느 경우에도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서 정확한 추정이란 어쩌면 이상적인 생각일지 모른다. 그러나 얼마가 필요한가의 부분은 목표수치를 결정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될 것이다.
- 농업관련인력의 부분은 생산인력규모와의 관계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 김완배 등(2000)은 1998년 현재 생산농업종사자(48.65%), 농림수산가공 및 유통산업(47.96%), 농림수산관련 서비스 및 지식산업(1.90%), 농업투입재산업(1.49%)로 파악하여 농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를 1998년 현재 506만 2천명으로 추정하였고, 정철영의 연구(1996, p.17)에서도 농업관련직 종사자가 농업생산직 종사자보다 1~6.7배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련직의 수요 추정은 생산직의 1배이상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얼마나 적절한 규모인가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만 관련직이 생산직과 관련을 맺고 있음으로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 필요인력의 추정은 농산물 소비량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농산물 소비량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생산량과 외국수입량을 합산한 후, 외국에 수출되는 양을 빼고, 손실 부분을 뺀 부분으로서, 이들을 공급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검토될 부분은 자급률을 얼마로 할 것인가의 부분과 주어진 생산량을 생산하기 위한 변수로서의 토지면적 부분과 생산기술의 부분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완전자급을 전제로 할 때와 일부분만을 자급한다고 볼 때의 생산량이 차이가 있으며, 토지의 생산성과 생산기술은 식물과 동물의 생산에 필요한 인력 수요에 영향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 핵심으로 삼고 있는 농업 생산 분야의 정예인력은 토지의 생산성을 높여 토지면적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필요인력은 동시에 총 규모 얼마라는 식의 평면적 수준의 필요인력으로 규정될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측면의 농업 인력을 추정하여야 한다. 이는 사람에 따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이나 업무 능력이 차이가 있으므로 각 수준의 인력별로 규모가 추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농업생산분야의 경우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다양한 식물이나 동물성 식품을 생산할 때 각각의 생산자가 다를 것이므로 적절한 생산 규모를 담당할 인력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의 다른 부분은 농업과 다른 부분의 결합 형태이므로 정확한 추정이 어려우나 산업간의 연관표에 따라 비율을 추정하여 상대적인 인력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정예농업인력으로서 규정한 농림부의 목표치인 20만호는 최근의 농가호당 평균인구수를 고려한다면 최근 2.70(2005년 호당농가인구)이므로 54만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들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경지면적이 늘거나 경지면적의 활용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식량공급의 비율은 급격히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외에 어떤 형태이든지 다른 유형의 생산농업인구가 있음을 전제하여야 할 것이다.

- 농업생산분야에서도 1인당 식품소비량의 변화를 보면 식품소비량의 증가, 축산물과 채소류, 과일류, 옥수수과 밀의 소비 증가, 쌀과 보리의 소비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구증가현상을 고려할 때 더욱 많은 생산인력의 투입이나 생산성 증가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키거나, 외국에서 수입량을 늘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농업인력 내부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인력의 조정이 필요함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인의 50%정도가 쌀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들 부분에 대한 수요 감소는 다른 부분의 생산으로 교체하여야 함을 말한다. 복합영농을 하는 집단에서 그들의 주작목을 벼가 아닌 다른 작목으로 변화시켜야 함을 지적한다. 지금까지 거의 생산되지 않았던 밀의 생산과 옥수수의 생산을 검토하는 부분도 식품소비량을 기준으로 인력 수요를 추정할 때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에 따라 농업관련직의 구성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4. 정예농업인력의 공급

- 지금까지 정예농업인력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농업생산직에 대한 수요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농업관계직은 사람들의 선호도 있고, 적절한 정도의 수익이 있는 부분에 국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농업생산직에 대한 지원의 시급성에 비하여 필요성이 덜 인정되고 있다. 농업교육을 실시하는 농과계 대학이나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선호도 저하로 인한 미달 현상이나 연구비 부족으로 학과 명칭을 바꾸고, 교과목도 대폭 바뀐 상태이다. 그러므로 정예농업인력의 전제로서 논의되는 능력, 자본, 의사, 성장가능성의 요소중 첫 번째 능력과 의사의 부분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 정예인력의 공급은 두가지 경로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정규학교를 통한 방법과 비정규프로그램을 통한 방법이 그 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정규학교를 통한 접근은 농업계열 고등학교와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을 통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국의 농업계열학과가 설치된 농업계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매년 배출되는 졸업생이 될 것이다. 농업계열고등학교는 2006년 현재 73개교이고, 농업계열 전문대학은 13개교, 농학계 대학은 43개교이다(나승일, 2007, p.180). 그에 비하여 비정규프로그램은 귀농자나 전직자 집단의 이수를 통한 유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전직자는 귀농에 대한 연구결과(강대구, 2006, 2007)에서 보여지듯이 유입자의 배경에 따라 귀농의 성공여부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순전히 귀농교육의 이수만으로 농업부문으로 전혀 기초가 없는 사람이 유입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농업부문의 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는 형태라고 한다면 농업인 단체에 취업되거나, 농업 컨설팅업이나 농산물 유통분야가 가능할 것이나, 이들 분야는 명백한 별도의 교육기회가 없고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귀농학교의 경우도 1997년경의 IMF초기에 유입이 많이 되었으나 이들 모두가 정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학교에 따라 정착율에 차이가 많았다.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도시 지역은 비교적 귀농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이지만 뚜렷한 주체가 없는 경우는 귀농학교가 운영되다가 폐지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그 외의 프로그램은 신규인력의 유입보다는 기존 인력의 교육에 치중된 것으로 판단된다.

- 농업계열 고등학교의 학생수와 학과수는 <표 1>과 같다. 817개학과에 21,932명으로 1년에 7,000명정도가 배출되고 있다. 이들의 입학경쟁률은 2006년의 경우 대략 1.1:1의 평균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입학자는 정원에 비하여 낮은 상태로 입학정원의 93%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정원 미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한다. 또한 37%정도가 여학생이고, 졸업자의 64.6%가 진학, 28.2%가 취업하고 있다.
- 농업인력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농업계 고등학교나 농업계열 대학은 통계

에서 사용되는 계열의 구분 기준을 2002년부터 바꾸었으므로 일부 농과계 학과들이 다른 분야의 계열로 구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³. 그러므로 인원수의 감소는 더욱 많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경우 학과들이 개편되면서 전통적인 형태의 학과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농학이나 원예나 임학을 제외하고는 농생물이나 농화학, 식품, 농토목이나 농기계를 포함한 농공분야의 학과들은 명칭을 대폭 바꾸어서 통계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학의 경우 전체 학생수의 규모가 1999년이래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6년 기준으로 학생수의 규모는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을 합하여 26,624명으로 방송통신대학의 학생수 4,000명 정도를 제외하면 2,200여명이 농과계, 그중에서도 생산농업에 관련된 학과의 학생들이라는 점이다. 이는 학교유형별로 학년수가 다르므로 2006년을 기준으로 할때 전문대학은 1,600명, 산업대학 699명, 대학 4,120명이고, 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는 5년제이므로 817명 정도로 도합 7,236명 정도가 대학에서 농업계열로서 1년에 배출되는 인력규모라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7,300명 정도를 포함하면 14,500명이 매년 배출되는 규모이다. 통신대학은 5년제이므로 정시에 졸업하기보다 일정한 기간의 지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규모보다는 적을 것이다.

3 이는 지역사회개발분야나 농경제분야가 어느 계열로 구분되었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들외에도 농화학이나 농생물과, 천연섬유학과가 바뀌면서 다른 명칭을 가지게 되어 다른 분야의 학과들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표 1. 농업계열고등학교의 학생수와 학과수, 입학과 진로 현황

구 분	합 계			입 학 상 황					졸 업 후 상 황					
	학 급 수	학생수		입학 정원	지원자		입학자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농업경영과	12	314	116	100	130	48	118	41	87	40	53	19	32	19
생명산업자영과	3	49	21	30	14	7	14	7	11	3	5	2	6	1
자영과	26	612	142	225	305	103	230	76	198	34	112	16	86	18
자영농과	5	91	30	25	26	7	24	5	29	7	17	2	11	4
자영농업	1	25	9	-	-	-	-	-	23	5	17	4	5	1
자영생명산업과	9	208	9	75	80	1	78	1	25	4	22	3	2	1
자영생명과학과	1	12	-	30	12	-	12	-	-	-	-	-	-	-
차산업경영과	2	36	25	26	17	12	17	12	-	-	-	-	-	-
자영농 소계	59	1,347	352	511	584	178	493	142	373	93	226	46	142	44
농산물유통과	2	74	29	37	37	15	22	-	63	25	29	15	34	10
농업유통정보과	18	550	219	193	201	82	186	77	178	88	146	67	25	16
농업전산과	9	210	79	56	56	18	52	16	98	44	66	28	32	16
생물산업정보과	2	40	17	50	52	25	52	25	-	-	-	-	-	-
생물산업정보기계과	3	39	7	26	16	5	16	5	13	1	5	-	7	1
유통,정보 소계	34	913	351	362	362	145	328	123	352	158	246	110	98	43
산업조경과	3	84	29	35	28	4	28	4	22	6	13	1	9	5
원예조경과	3	87	32	28	29	9	29	9	28	9	26	7	2	2
자영조경과	3	87	16	30	39	6	30	6	28	4	28	4	-	-
조경과	31	824	317	278	253	82	239	79	323	107	230	78	70	27
환경조경과	7	212	58	35	34	12	35	13	83	18	67	16	7	1
생태조경과	2	59	21	60	60	22	60	22	-	-	-	-	-	-
조경토목과	1	13	1	30	12	1	12	1	-	-	-	-	-	-
조경계열 소계	50	1,366	474	496	455	136	433	134	484	144	364	106	88	35
농업토목과	26	670	62	243	267	38	235	29	233	14	173	12	51	2
농산업기계과	3	83	1	30	39	-	30	-	27	2	16	2	11	-
농업기계과	38	799	97	319	296	37	274	32	302	41	164	22	109	15
동력기계과	36	1,039	-	409	443	-	309	-	373	-	138	-	213	-
산업기계과	58	1,507	56	576	677	26	517	19	457	22	308	18	119	4
산업기계기술과	3	75	-	25	33	-	26	-	24	-	18	-	6	-
농공계열 소계	164	4,173	216	1,602	1,755	101	1,391	80	1,416	79	817	54	509	21

표 1. 농업계열고등학교의 학생수와 학과수, 입학과 진로 현황(계속)

구 분	합 계			입 학 상 황				졸 업 후 상 황						
	학 급 수	학생수		입학 정원	지원자		입학자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국제농축산학과	9	257	95	90	153	40	92	29	75	37	42	20	33	17
마필축산과	3	66	10	24	51	8	24	4	21	3	5	-	16	3
자영축산과	6	147	35	55	71	12	55	9	37	5	27	4	10	1
축산경영과	3	75	15	25	31	4	27	1	24	12	6	2	14	7
축산과	10	351	172	105	143	57	112	47	137	57	100	48	34	9
동물자원과	25	723	293	305	312	135	269	115	259	84	174	50	54	25
축산자원과학과	3	76	19	25	40	8	26	8	26	7	15	3	11	4
애완동물과	14	420	220	164	183	99	170	93	95	49	79	40	8	5
동물계열 소계	73	2,115	859	793	984	363	775	306	674	254	448	167	180	71
도시원예과	10	281	130	120	151	99	106	60	75	44	42	24	33	20
생활원예과	18	516	346	159	164	123	155	119	170	105	103	58	40	34
시설원예과	12	259	134	105	96	40	87	39	126	54	85	31	38	22
원예과	44	1,026	597	307	282	150	279	146	427	259	241	136	122	91
원예자원과학과	3	75	46	25	32	19	27	18	24	13	19	10	3	2
원예경영과	3	85	52	25	31	12	28	10	30	15	21	11	9	4
자영원예과	8	213	102	85	90	39	85	36	42	24	29	17	8	3
조경원예과	6	155	95	65	53	32	49	32	49	17	40	14	9	3
화훼장식	9	304	221	133	151	103	139	101	94	60	59	32	21	15
관상원예	3	63	20	28	19	6	19	6	23	9	12	6	11	3
응용화훼과	2	59	43	60	60	43	60	43	-	-	-	-	-	-
화훼디자인과	1	11	2	30	12	2	12	2	-	-	-	-	-	-
원예 계열 소계	119	3,047	1,788	1,142	1,141	668	1,046	612	1,060	600	651	339	294	197
생명과학과	21	605	259	219	273	107	229	92	167	49	107	23	60	26
생물공학과	2	46	19	-	-	-	-	-	26	7	22	4	3	2
식물과학과	4	117	26	60	68	14	61	13	-	-	-	-	-	-
생물과학과	9	290	165	102	135	113	106	85	100	40	80	32	1	-
자연과학과	3	83	24	-	-	-	-	-	78	23	43	11	29	10

표 1. 농업계열고등학교의 학생수와 학과수, 입학과 진로 현황(계속)

구 분	합 계			입 학 상 황					졸 업 후 상 황					
	학 급 수	학생수		입학 정원	지원자		입학자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산림환경자원과	6	181	83	63	43	23	63	27	56	22	47	18	5	3
환경보건과	9	223	92	98	78	32	72	30	75	34	50	19	22	13
생물자원과	6	163	100	60	67	32	64	32	51	34	28	19	23	15
식량자원과학과	6	159	51	55	63	19	56	13	51	18	31	7	17	8
식물자원과	29	793	293	344	432	108	324	70	277	120	172	73	45	22
생물자원응용과	3	43	-	30	11	-	11	-	-	-	-	-	-	-
식물자원가공과	3	62	28	25	25	12	25	12	8	2	1	-	7	2
한약자원과	3	65	29	53	40	19	40	19	-	-	-	-	-	-
생물공학, 자원계	104	2,830	1,169	1,109	1,235	479	1,051	393	889	349	581	206	212	101
식품가공과	121	3,439	1,472	1,130	1,473	635	1,123	508	1,196	460	795	289	322	137
식품공업과	20	526	282	175	169	69	168	68	229	144	132	83	88	56
식품과학과	13	403	254	197	187	133	159	117	61	30	48	24	7	4
식품산업과	18	601	414	213	247	197	213	178	206	115	144	85	34	18
자영식품산업과	3	86	44	30	37	20	30	18	29	13	24	10	5	3
제과제빵과	5	146	130	60	61	45	61	45	27	27	10	10	17	17
바이오식품	5	152	82	122	123	60	84	51	36	17	36	17	-	-
식품생명과학과	6	199	-	68	83	-	72	-	73	-	54	-	19	-
베이킹디자인과	2	56	26	30	52	27	30	18	-	-	-	-	-	-
바이오식품가공과	1	30	16	30	31	16	30	16	-	-	-	-	-	-
식품가공계열소계	194	5,638	2,720	2,055	2,463	1,202	1,970	1,019	1,857	806	1,243	518	492	235
골프관리과	9	177	36	73	74	16	73	15	11	4	6	1	5	3
골프환경과	2	62	34	33	36	18	33	18	-	-	-	-	-	-
골프경영관리과	1	30	3	30	65	8	30	3	-	-	-	-	-	-
관광골프관리과	3	98	30	34	37	12	35	10	29	12	28	11	1	1
관광농업과	3	71	53	26	19	18	19	18	23	15	11	7	10	7
관광원예과	3	95	62	34	41	25	37	21	29	18	29	18	-	-
관광·골프 소계	21	533	218	230	272	97	227	85	92	49	74	37	16	11
계	817	21,932	8,144	8300	9,251	3,369	7,714	2,894	7,197	2,532	4,650	1,583	2,031	758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7), 교육인적자원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index.jsp>)

표 2. 고등교육기관의 농업계열의 학과수와 학생수 변화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문 대학	조경	10(1,560)	12(1,899)	11(2,083)	12(2,044)	12(1,848)	12(1,696)	12(1,495)	9(1,163)
	농수산	14(1,543)	10(1,340)	8(1,071)	6(997)	6(1,049)	5(949)	5(803)	7(1,054)
	원예	14(1,798)	14(1,470)	14(1,519)	14(1,688)	15(1,485)	14(945)	13(942)	18(1,046)
	계	38(4,901)	36(4,709)	33(4,673)	32(4,729)	33(4,382)	31(3,590)	30(3,240)	34(3,263)
산업 대학	조경학	5(1,167)	5(1,203)	5(1,196)	5(1,157)	6(1,167)	6(1,191)	6(1,296)	9(1,205)
	농업학	15(1,938)	12(1,482)	10(1,265)	8(942)	6(16)	4(549)	4(555)	2(285)
	산림·원예학	10(1,283)	10(1,361)	10(1,368)	10(1,376)	10(1,457)	10(1,294)	10(1,403)	14(1,307)
	소계	30(4,388)	27(4,046)	25(3,829)	23(3,475)	22(2,640)	20(3,034)	20(3,254)	25(2,797)
방송대 농업학		1(7,335)	1(7,399)	1(6,922)	1(6,142)	1(4,641)	1(4,012)	1(3,964)	1(4,084)
대학	조경학	29(4,148)	29(3,557)	30(3,405)	25(2,369)	20(2,264)	20(2,548)	23(2,716)	24(2,821)
	농업학	62(8,115)	62(7,355)	59(6,604)	56(5,172)	47(4,477)	44(4,069)	35(3,585)	40(3,547)
	동물·수의학	23(3,472)	25(3,271)	25(3,002)	26(3,416)	26(3,834)	27(4,051)	27(4,224)	30(4,418)
	산림·원예학	69(7,744)	63(7,179)	68(7,251)	62(6,647)	54(6,302)	56(6,371)	56(5,703)	65(5,694)
	소계	183(23,479)	179(21,362)	182(20,262)	169(17,604)	147(16,877)	147(17,039)	141(162,28)	159(16,480)
각종 학교	농업학	0	1(2)	0	0	0	0	0	0
	산림·원예학	1(4)	1(1)	1(1)	0	0	0	0	0
총계		321(40,127)	245(37,519)	242(35,687)	225(31,950)	203(28,540)	199(27,675)	192(26,686)	219(26,624)

*()안은 학과수(학생수)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7), 교육인적자원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index.jsp>.)

- 또한 이들의 농업분야의 취업률을 고려하여야 농업분야에 공급되는 대략적인 규모가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농업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이 1년에 7,300명정도가 졸업한다면 이들이 취업하는 비율은 28.2%로 2,044명이 취업자가 될 것이나, 이중에서 얼마나 농업분야에 취업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김진모, 김진균, 마상진의 연구(2006, pp.26-27)에 따르면 전체 고등학교 졸업자중 농림어업분야 취업자는 매년 감소하여 2002년의 경우 934명으로 취업자중 0.8%이며 전체 취업률은 17.1%정도였다. 그중 농업계 출신자의 비율은 543명으로 농림어업취업자의 농업계고교출신자의 비

율이 58.1%로 1980년이래 50%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전문대학 출신자의 농림어업분야 취업비율은 취업자중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되어 1%미만이었으며, 인구수도 줄어들어 전문대학 출신자의 취업률이 증가하는데 비하여 비중은 감소하고 있었으며, 2002년의 경우 943명이었다. 4년제 대학 졸업자의 농림어업분야취업자는 전체 대학졸업자의 2.1%정도이고, 대학 졸업생 취업률이 2002년의 경우 52.85%였으며 농림어업분야 취업자가 98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0.76%정도였다. 이는 연도별로 변동이 있으나 대략 1%미만의 취업이 농림어업분야에 유입되고 있음을 말한다.

- 고등교육기관의 농학계열학과 졸업자들의 취업분야가 전공과 일치하는 비율은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69.3%이고, 전문대학졸업자는 75.9%이고, 4년제 대학은 66.5%수준이었다. 비록 2006년 졸업자의 경우이긴 하나 졸업자중 70%정도가 전공분야로 취업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산업분야에서나 직업분야에서 농업분야에 취업하는 비율을 파악하면 보다 정확한 실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전문대학/대학 농학계열학과 졸업자의 취업분야의 전공일치 현황(2006년)

구	분	합 계		전공일치여부			
				전공분야		다른전공	
		계	여	계	여	계	여
전문 대학	조경	353	146	264	97	89	49
	농수산	171	23	156	19	15	4
	원예	156	74	96	48	60	26
대학	조경학	345	152	280	116	65	36
	농업학	323	123	183	51	140	72
	산림·원예학	644	302	355	152	289	150
	동물·수의학	248	115	219	100	29	15
총계		2,240	935	1,553	583	687	352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7), 한국교육인적자원 통계서비스(취업통계연보).
<http://cesi.kedi.re.kr/index.jsp>.

- 농업계열 대학과 전문대학 졸업생들의 산업분류에 따른 취업자 분포는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2,240명중 농림업부분에 268명으로 11.9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직업분류에 따른 취업자 분포는 <표 5>와 같이 농림어업숙련종사자 직업군에 471명이 취업하여 21.0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숙련직 종사자와 농림업부문과는 어업부문이 있으므로 오차가 있을 수 있을지라도 생산농업분야의 취업은 12~21%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말한다. 이는 매년 졸업생의 일부만이 농업분야 그중에서도 생산분야에 취업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는 직업수준을 고려할 때 생산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라고 할 수 있다.
-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추정될 수 있는 농업계열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농업계열의 인력 공급 규모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 농업계 고등학교: $7300\text{명} \times 0.28 \times 0.58 = 1185.52 \approx 1186\text{명}$, 농과계 대학: $6419\text{명} \times 0.5 \times 0.69 = 2214.555 \approx 2215\text{명}$. 도합 3400명정도의 인력이 가능한 공급규모이다.
- 그러나 이들은 농업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률 상승과 농업계열 학과의 축소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농업생산직으로의 신규유입은 대학생들의 취업상황분석에서도 파악되듯이 위의 비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1,800명 정도로 축소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들 수치는 현재의 수치를 가지고 추정한 것이므로 실제의 추정은 더욱 다른 규모가 될 것이다.
- 문제는 이들 모두가 정예농업인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들이 단지 입직자의 조건이 아닌 성장한 인력으로 성장하려고 한다면 이들 규모에서 일정 비율의 탈락자를 가정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표 4. 전문대학/대학 농학계열 학과의 산업별 취업자수(2006년)

계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문화, 문예,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분류불능 산업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조경	353	146	42	30	-	-	-	-	27	8	1	-	159	45	34	16	6	2	-	6	3	1	1	5	2	17	10	7	4	4	2	2	1	9	2	32	20	1	-	-	-
농수산	171	23	40	1	2	-	-	17	2	-	-	95	17	-	2	1	1	1	-	-	-	2	-	5	-	-	-	-	-	-	-	-	-	-	-	-	-	-	-		
원예	156	74	39	14	-	-	-	19	6	-	3	1	11	7	1	-	4	1	1	10	6	-	7	2	13	1	4	4	1	1	1	-	42	30	-	-	-	-	-		
조경학	345	152	9	3	-	-	-	14	3	-	188	76	11	4	2	2	1	1	-	5	3	59	30	20	8	16	12	2	1	10	4	4	3	-	-	-	-	-	-		
농업학	323	123	28	7	-	-	1	76	24	1	57	12	34	12	14	12	5	3	3	11	5	1	17	8	18	4	31	23	5	4	6	1	15	5	-	-	-	-	-		
산림·원예학	644	302	105	33	-	-	1	79	15	1	46	23	73	32	19	11	12	7	8	4	26	14	7	2	57	36	51	16	81	62	10	8	33	17	33	20	1	1	1	1	-
동물·수의학	248	115	5	-	-	-	-	22	13	-	2	1	11	2	-	1	1	5	2	-	10	6	34	17	9	5	139	62	3	2	5	4	-	-	1	-	-	-			
계	2240	935	268	88	2	0	2	254	71	3	1	455	153	177	74	43	27	13	20	11	149	45	8	163	93	144	51	146	108	159	77	64	26	136	82	2	1	2	1	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7), 한국교육인적자원 통계서비스(취업통계연보). <http://cesi.kedi.re.kr/index.jsp>.

표 5. 전문대학/대학 농학계열 졸업자의 전공별 직업별 취업자 분포(2006년)

		계		의원, 고위임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전문 대학	조정	353	146	5	-	134	31	40	7	61	51	8	5	16	11	60	37	6	1	14	2	9	1	-	-
	농수산	171	23	1	-	-	-	10	3	92	18	6	1	3	-	40	-	-	-	15	1	4	-	-	-
	원예	156	74	4	-	6	4	15	4	24	17	4	2	46	39	33	5	3	-	12	2	3	1	6	-
대학	조경학	345	152	1	-	20	10	35	15	36	18	5	4	6	3	218	94	11	4	5	1	4	3	4	-
	농업학	323	123	1	-	22	12	84	24	97	56	19	14	5	2	13	3	49	7	17	1	10	4	6	-
	산림· 원예학	644	302	2	1	72	51	173	66	164	103	21	11	44	21	105	41	16	5	28	2	13	1	6	-
	동물· 수의학	248	115	-	-	188	91	21	7	20	13	4	4	1	-	2	-	-	-	-	-	2	-	10	-
계	2,240	935	14	1	442	199	378	126	494	276	67	41	121	76	471	180	85	17	91	9	45	10	32	0	

5. 정예농업인력 육성 방향

- 정예농업인력의 육성 방향은 어떤 인력을 가정할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집중되었던 생산농업인력은 쌀의 생산만이 아닌 밀과 옥수수의 생산능력을 갖춘 인력과, 과일과 육류의 생산을 주도할 원예 및 축산농업인력의 요구가 우선적일 것이다. 현재 축산분야는 대농층이므로 원예나 축산농업을 시도하려면 전문교육, 의지, 기술만이 아닌 자본의 확보가 요구된다. 현재 농지의 제한으로서 급격한 농지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고, 나이든 농가들이 사망 등으로 도시의 자녀들에게 상속됨으로서 농

지가 포기되는 경우외에는 농지의 급격한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농지의 확대보다는 자본의 집약화에 따른 생산 능력의 개선이 요구될 것이므로 공장형 생산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있는 농기업가가 필요할 것이다. 생산농업이외의 농업분야도 다양한 분야의 성장이 예기될 수 있다. 전문직이나 기술직, 컨설팅이나 일용노무직등의 요구가 존재할 것이므로 이들 분야에 필요한 인력도 요구된다. 특히 공급 규모의 축소로 인한 농업계 교육분야의 축소는 정예농업인력의 육성에 있어서 한계로서 작용할 것이다.

- 정예농업인력의 육성 방향은 국가사회적인 요구도 생각하여야 하나 개인적으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개인의 생애발달의 관점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개인의 농업 인력들이 만족할 수 있고 자신들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농업 직업을 선택하도록 도와야하고, 자신들이 선호하는 삶의 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중시되는 경력관리(Career Management)의 관점이다. 개개인의 생애목표와 부합하되 이 과정에서 각 개인의 수행도 개선(Performance Improvement)을 위한 능력개발이 필요하며, 이들 능력 개발은 개인의 경력관리를 통한 발달이 가능하나, 동시에 이들 개인의 발달은 조직(또는 개인이 속한 지역사회)의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인적자원개발의 3가지 요소이다. 개인의 수행능력개선과 조직의 개선, 경력 관리의 측면이 그 예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수행능력개선과 함께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개선과 발달, 이들 과정을 통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일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이들의 학습계획을 기록화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경력관리의 부분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 이는 농업인력육성의 단계를 진로발달단계에 비추어 제시한 연구(강대구, 2004, 정철영, 1998)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 정예농업인력육성방향은 개인의 직업발달과 지역사회와 지역인적자원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정예농업인력 육성 방안으로서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은 거시적 방법과 미시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시적 방안은 교육과정이나 학교운영체제의 획기적인 변화와 같은 구조나 체계의 변화 방향이 그예가 될 것이고, 미시적 방안은 점진적인 변화를 전제하는 수업방법이나 수업매체의 변화, 자금의 지원과 같이 유입인력의 정착률을 제고하는 방안들이 될 것이다.
- 첫째, 거시적 방법으로서 새로운 농업인력육성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과거 한국농업전문학교와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의 설치가 그 예인데, 전문화된 직업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장소로서는 가장 유입 인구가 많은 도시인 서울시에 ‘농업교육센터’나 ‘농업과학고등학교’와 같은 전문계 농업고등학교를 설치하는 방안이 하나의 예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미국 ‘시카고 농업과학고등학교’나 ‘Career Academy’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운영 형태는 단독 형태의 학교나 방과후 프로그램과 같이 기존 학교의 보완 형태로 운영되거나, 시 교육청 산하의 직업학교와 같이 직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 학교 수업과 Academy수업을 함께 하는 형태가 고려될 수 있다. 이는 sandwich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야마부키 고등학교는 정규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1주일에 2일 정도는 그곳 학교에서 출석하여 수업을 듣거나 활동을 한다. 이는 학교를 휴학하였다가 들어온 학생들에 대한 과정이었으나 기존 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1-2개의 학교로서는 불가능하고 3-5개 이상의 학교들을 동시에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 둘째, 거시적 방법으로서 현재 농림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간에 논의되는 협약학교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협약학교의 핵심은 협약서이므로, 협약

서에 구체적 달성 목표가 명시되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시설과 재정 지원이 수반되는 형태이다. 농업분야의 직업중 생산농업직은 생산기반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이 대개 자영농 중심이므로 초보 농업인이 기술자가 되어 정착하기까지 이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며 기술을 익히게 하는 과정이 없는데, 특히 농업 배경이 없는 학생들이 선발될 때의 문제이다. 농업교육의 효과는 직접적인 경우도 있으나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농업교육의 효과가 신속히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귀농자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파악되었듯이 응답자의 15%정도가 농업계 학교 출신자인데, 이는 농업계 출신자들이 농업인력으로서 상당히 공급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2002년의 경우 전체 고등학교 졸업자중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1.3%, 전문대학 졸업자중 농업계 출신자가 0.7%, 4년제 대학 졸업자중 농업계 출신자가 2.1%라는 점을 고려하면 2002년의 결과이긴 하나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를 합하면 115만여명이 되는데, 농업계 학교 출신자는 15,046명⁴으로 1.3%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귀농의 상당부분이 농업교육의 효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같이 농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료하고 일정한 경영능력을 갖춘 학생들에게 자금과 과제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다. 협약학교는 기존 학교를 바꾸는 과정이므로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되 협약서를 구체적으로 하여 책임질 일과 아닌 일들을 구별하도록 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일정한 기간 운영의 책임을 맡기는 문제가 검토될 수 있다. 이때 이들 학교의 정원이나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 대신 책임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 있다.

- 셋째, 미시적 방안으로서 독자적인 학교보다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형

4 김진모, 김진균, 마상진(2006, pp.26-27)에서 재 정리함.

태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부설된 직업반을 활용하거나 독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특히 서울은 귀농을 생각하는 집단이 있으므로 별도의 학교도 설치하고 이들 학교에 독자적인 교육센터를 세우는 방안이 하나가 될 것이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그곳에 중매인이나 경영자간의 입찰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을 독자적인 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는 학력인정과는 관계없이 취업을 중시하는 부분이므로 실제적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직업 훈련과 같이, 현장에서 수업과 체험, 실습을 통하여 농산물경매인을 만들거나 유통 전문인력을 기르는 부분이 고려될 수 있다.

- 넷째, 미시적 방안으로서 전문적인 농업경영교사의 배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미국 미네소타주는 농업교사와 농업경영교사가 있는데, 자격은 농업교사는 주의 교사자격기준에 따라 대학의 교육과 교육실습을 거쳐서 자격을 획득한 후 임용되면 되나, 농업경영교사는 이들외에 농장에서 현장실습을 2년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의 임용은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농업교사와 지역사회대학(Community College)에 근무하는 농업경영교사로 구분되고 있다. 이와같이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현장경력을 갖춘 교사들을 임용하여 농업전문인력의 육성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교사제도가 산학겸임교사 제도이다. 현재 산학겸임교사의 자격이 어떠한가 하는가의 기준은 없다. 다만 기존의 실기교사 자격을 준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산학겸임교사 역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기존의 자격분야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분야를 전담하는 교사이므로 농업교사 자격과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새로 나타난 농업분야의 내용을 잘 가르칠 전문가를 활용한다는 것은 중요하므로 산학겸임교사제도를 활용하여 Mentor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다섯째, 미시적 방안으로서 독자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논의될 수 있다. 현

제의 농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국가의 10년 공통교육과정 규제로 인하여 다양한 보통교과를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그로 인하여 1980년대 후반에 농업계 고등학교의 학제를 4년제로 늘리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었다. 이는 보통교과를 이수하다보면 전문교과를 이수하는데 투입될 시간이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준만으로 농업직에 바로 취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논의된 결과이다. 특히 생산농업직 취업을 결정한 학생들을 위하여 교양과목의 이수를 제한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과목이나 능력을 획득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교양과목 이수를 규정하는 제한들을 예외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 교육과정 자율학교로 지정받아야 할 것이다. 대학단계의 교육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면 자율학교제도와는 달리 대학당국의 허가나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원칙과의 양립가능성이 우선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대학의 경우도 산업체 실습이 있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 여섯째, 거시적 방안으로서 연계 교육과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 단계와 전문대학 단계의 학생 유치와 상호 이익을 위하여 Tech Prep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전공 분야가 유사한 서로 다른 학교급끼리 학생들의 전공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학생 수준에 따라 다르게 편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Tech Prep는 농업계 고등학교와 관련 대학의 학과들과의 협력을 전제로 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공동 개발 등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추구하는데, 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의 과목 선이수를 허용하고 개인의 능력이나 이수 형태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적절한 교육과정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대학과 고등학교간의 질적 인정을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계교육과정은 대학과 고등학교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농업관련산업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때는

현장실습이나 견학의 장소와 인력 지원을 농업관련산업체가 맡는 경우이다. 농산물 유통 전문가를 기르는 과정에서는 농산물 유통 현장을 수시로 견학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농수산물 유통공사나 농협 하나로마트등의 업체가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생산농업 분야인 경우는 영농법인이나 영농회사법인, RPC나 ARPC를 운영하는 단체나 법인과 같이 선도적 농업경영체나 생산조직이 조직원 교육을 위한 지원 인력과 시설을 연계교육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 일곱째, 거시적 방안으로서 학교기관이외의 별도의 기관을 주축으로 하여 신규인력양성학교를 만드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대개 교육기관하면 학력인정을 전제로 운영하여 목적에 맞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물론 학력인정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은 별다른 어려움없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기관이 좋은 인력을 특정 분야에 잘 배출한다면 그 분야의 학생 모집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때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이 각종학교 형태이다. 현재 생산농업종사자 확보를 위하여 대학과정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은 기존 교육과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특별 프로그램 형태로서 국가의 자금 지원이 없는 경우 계속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고등학교 단계는 교육과정에 대한 제한으로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학력과 무관한 녹색대학이나 벤처농업대학, 실상사 귀농학교 등은 재정확보의 어려움은 있으나 목적에 맞는 인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운영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여덟째, 거시적인 방안으로서 학점은행제와 같이 농업인 단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농업경영에 관련된 과목이나 시간을 수강하고 농업경영자 자격을 부여하는 학점이나 수업능력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제도의 도입이 있을 수 있다.

- 아홉째, 미시적 방안으로서는 학생들의 농업에 관한 흥미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학교단위의 과제자금 지원과 학교포장을 활용한 농업과제이수를 지원하는 제도가 검토될 수 있다. 각 농업계 학교에는 상당부분의 농장이 있고 이들 농장에서 생산물을 생산하여 다음해 학교농장의 운영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각 시도교육청 단위로 농장의 수익금 불입 방법을 바꾸고 있으나 여전히 다음해 운영을 위하여 농장 운영을 수익을 추구하는 일을 제외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므로 농업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1학년말에 자신들이 수행할 과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심사한 후 적절한 과제에 대하여는 학교 농장을 이용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농업계 학교는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학습 열의를 제고시키는 방법이 되고 있다.
- 열째, 농업계 학교 학생이나 기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농직업체험활동을 지원할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학교기업을 운영하거나 Job Shadowing, 봉사학습(Service Learning), 창업 프로그램, Internship, 현장실습, 진로후견인제도등의 다양한 직업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을 지원하여 농업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그 외에도 농업직업을 알릴 수 있는 홍보기회를 갖는 것이나, 생산농업에 대한 흥미를 제고할 수 있는 체험학습기회를 제공하는것, 다양한 학습방법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각급 학교나 기관들의 현장의 경험적 증거에 기초한 새로운 방안의 개발을 위한 연구자금을 지원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들은 기존 인력들의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과도 관련을 맺어야 한다.

참고 문헌

- 강대구, 정철영, 이종상(2004). 농업인력 구조변화에 따른 정예농업인력 육성방안 연구. 농림부 정책연구보고서.
- 강대구(2006). 농업교육을 통한 신규 농업인력 확보 방안. 2006년 한국농업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pp.65-85.
- 강순희 외(2000). 지식경제와 인력수요전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경덕(1998). 농업인력의 현황분석과 중장기 수급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 김경덕(2005). 농업인력 구조의 현황과 전망. 2005년 한국농업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pp.11-48.
- 김진모, 김진균, 마상진(2006). 농어업인 교육정책 혁신.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 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김휴현(2007). 정예농업인력육성종합대책. 2007년 한국농업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pp.91-161.
- 나승일(2007). 농업인력개발전문가 양성실태 및 개선방안. 2007년 한국농업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pp.163-220.
- 장창원 외(1998). 산업인력 수급 전망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본연구 98-5.
- 장태평(2005). 정예농업인력육성의 방향과 과제. 2005년도 한국농업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pp.57-78.
- Hoover, N. K.(1977), Handbook of Agricultural Occupations, 3rd ed., The Interstate Printers & Publishers.

한국농업대학 10년의 경험과 과제

— 이 영 석 (한국농업대학 교수)

1. 한국농업대학의 설립배경과 목적	65
2. 교육철학과 이념	67
3. 대학의 이상과 교육목표	68
4. 교육·훈련의 단계와 구성	72
5. 교과목의 구성	74
6. 졸업생의 영농정착실태	91
7. 요약 및 건의	97

한국농업대학 10년의 경험과 과제

1. 한국농업대학의 설립배경과 목적

□ 설립배경

- 1994년 2월 1일 대통령자문기구로 발족한 농어촌발전위원회(위원장 김범일)는 6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면서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 『농정개혁의 과제와 방향』에서 학교설립에 대하여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 품목의 전문 농림수산업 기술을 선도할 핵심 중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3정도의 농림수산경영기술전문대학을 신설하여 시범운영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한다. …… 교육과정은 첨단 농림수산업기술훈련위주의 교육과 개방대학식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졸업생에 대해서는 전원 농어민후계자로 지정하고 일정한 평가를 거친 졸업생에게는 농림수산기술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다. 또한 병역과 학비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취학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한다.”[농어촌발전위원회, 1994: 19-20]

- 그러나 당시 정부와 학계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고, 교육은 교육부 소관업무로, 농림부가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웠으며, 교육부에서는 농고와 농업전문대학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농업전문대학을 설립한다는데 동의하기 어려운 처지였고, 특히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는 기존의 농업계 대학들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국립 농업전문대학 설립은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관련기관들의 입장은 한국농업전문대학의 설립에 부정적이었음.

- 설립을 검토할 당시, 전국의 농고는 1970년의 123개교에서 1994년에는 그의 1/5에 불과한 25개교로 줄었고, 전국의 8개 국립 농전은 7개교가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고 겨우 1개교만 전문대학으로 남아 있었음.
- 하지만, UR농업협상이 타결되어 WTO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개방에 대비하여야 했고, 개방화의 충격에 희망을 잃고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의 농업·농촌은 우리 농업을 지켜나갈 투철한 사명감과 시장경제체제 안에서 우리 농업을 성장·발전시켜나가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세계화 마인드를 가진 차세대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이 우리 농업을 지키는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길이라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면서 설립이 결정되었음.
- 따라서, 기존의 농과대학이나 농업전문대학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학교로 한국농업전문학교가 설립되어야 했고, 이로써 한국농업대학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세계화 추세와 시장경제 하에서도 성공적으로 농장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말할 수 있음.
- 이러한 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한국농업전문학교는, 병역의무를 자기 농장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고(산업기능요원), 모든 교육비와 기숙사비를 국가가 부담하며, 졸업생에게는 졸업 후 수업기간의 2배인 6년간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 의무가 주어짐.

□ 목적

- 학칙 제1조(목적)에 “본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농업·농촌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며 투철한 직업의식과 현장중심의 지식·기술·경영능력 및 국제적인 안목을 갖추고, 농업 및 농촌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음.

- 이상에서와 같이, 한국농업대학의 설립은 선진국으로서의 필수조건인 ‘일정 수준 이상의 농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전문인력육성』을 더 이상 국민들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앞장서서 해결하는 국가적인 과제로 인식한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임으로,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졸업 후 영농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특수목적의 국립 전문대학’으로 설립되었음을 의미하며, 농업인구가 줄어들수록 정예화를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부담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오히려 커질 것으로 생각함.

2. 교육철학과 이념

- 한국농업대학의 교육이념은 궁극적으로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⁵,
 - ①농업으로 보국(保國)하는 전문농업인(국가관),
 - ②국가·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민주시민(민족관),
 - ③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세계인(세계관)으로,
 이를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한국농업대학의 교육목표는,
 - ①전문농업경영인 양성,
 - ②국제적 안목을 갖춘 세계속의 한국인 양성,

⁵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격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농업·농촌의 발전을 선도할 선도인력 양성이며,

○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①현장에서 탐구하고 실행으로 배우는 최고의 농업경영인(실사구시(實事求是)),

②사랑과 믿음과 정열로 새로운 농촌을 건설하는 농촌지도자,

③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지키는 흙의 주인(主人)을 양성하는 것임.⁶

3. 대학의 이상과 교육목표

□ 대학은 학문연구와 지식 및 기술의 전달, 인재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지만,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인재양성을 여러 목적중의 하나로 정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립 한국농업대학은 인재양성, 즉 ‘사람 양성’을 목적으로 함.

○ 한국농업대학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철한 직업의식과 현장중심의 지식·기술·경영능력 및 국제적인 안목을 갖추고, 농업 및 농촌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3년제 농업전문대학이기 때문에, 4년제 농과대학들이 농업을 학문적(學問的)으로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농업대학은 농업을 실무적(實務的)으로 가르치고 연구하는 대학임.

- 4년제 농과대학의 1차적인 목표는 농학(農學)이라는 ‘학문의 발전’이지만, 한국농업대학은 전문농업경영인이라는 ‘사람의 양성’이 우선적인

6 한국농업전문학교가 『우리의 다짐』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실천전략;
하나, 우리는 최고의 농업경영인이다. 현장에서 탐구하고 실행으로 배운다.
하나, 우리는 농촌을 지키는 지도자다. 사랑, 믿음, 정열로 새농촌을 건설한다.
하나, 우리는 흙의 주인이다.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지킨다.

목표이며, 그것은 전문대학과 4년제 일반대학의 일반적인 차이이기도 할 것임.

-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경영현장에서 일하고,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이 해당분야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정부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전문가, 혹은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연구에 종사하도록 구분할 필요가 없다면, 가르치는 내용이나 방법 등을 “농학(農學)”과 “농업(農業)”으로 구분할 필요도 없어지고,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할 필요도 없어져야 할 것임.
- 이는 곧, 만일 한국농업대학이 “농업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업을 가르치는 전문대학”이라는 본래의 설립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한국농업대학의 운영과 유지를 “국가”가 나서서 “국가적으로” 걱정하고 지원할 필요도 없어진다는 것을 뜻하며, 한국농업대학이 국민 각자가 스스로를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그의 성취를 위해서 교육을 받고, 그에 따른 비용도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다른 전문대학들과 같아진다면, 한국농업대학의 존립도 젊은이들의 농업기피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것임.

□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 대학이 다른 대학들과 다른(또는 달라야 하는) 점은, ①후계 농업전문인력(청년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설립목적), ②‘농업’을 실무적으로 가르치고, ③졸업 후에는 반드시 영농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임.

- 첫째, 후계농업인력 육성이란, 우리 농업의 장래를 짊어질 유능한 사람을 가르쳐 내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하여, ①영농종사에 대한 굳은 의지와 각오를 갖도록 하고, ②이를 실행에 옮기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하고, ③농촌사회의 지도자적 인격과 자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는 것임.

- 학문연구와 지식 및 기술의 전달, 인재양성 등을 목적으로 한 대학들처럼 수업을 하고, 성적을 매기고,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면 학위를 주고 졸업시키는 대학들과는 달리, ‘어떤 농장을 창업(또는 승계)하여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학생 개개인에 따라서 각기 다른 ‘최종 목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 개개인을 각각 지도하고자 하고 있음. 기초 과정인 1학년을 마치면 각자의 전공분야에 맞는 농장을 택하여 1년간 농장실습을 해야 하는 2학년 과정, 졸업 후 실천에 옮길 창업설계서를 작성해야 하는 3학년 과정이 모두 ‘개인지도’를 필요로 함.

- 또한 전교생에게 의무화되어 있는 기숙사생활은, 단순한 숙식문제 해결의 차원이 아니라, 공동생활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기초적인 질서와 소양, 농촌사회의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태도와 행동과 인격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훈련의 연장이며, 교수가 사감을 하고, 매일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사감을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임.
- 또한 후계농업인력이란 미래를 위한 차세대를 말하고, 우리 농업의 미래는 ①전문화, ②지식정보화, ③세계화의 진전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한국농업대학은 이러한 3가지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①기술-경영-판매와 관련된 다양한 교과목과, ②정보검색과 전자상거래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농업전산정보, ③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농업과 시장을 둘러보고 배우는 전교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소홀히 되고 있는 분야도 있고, 다소 편중되어 있거나 그의 구성과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없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둘째, 농업을 실무적(實務的)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여러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우선 학문적이 아니라 상품(商品)인 농산물별로 학과(學科)를 구분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다른 대학들과 다르고, 예를 들면, 고추를 학문적으로 보다는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그의 생산과 수확후 처리, 판매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임.

7 한국농업전문학교가 양성하여야 하는 “전문농업경영인”이란 학칙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투철한 직업의식과 ②현장중심의 지식·기술·경영능력과 ③국제적인 안목, ④농업 및 농촌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 정의할 수 있음.

- 물론 학문적 기초가 없이 훌륭한 상품을 만들어내고, 성공적인 경영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농업대학은 예컨대 작물의 생리와 병리, 생육, 생태, 육종 등에 대한 기초원리와 기초이론은 우리 대학의 교수들이 가르치고, 이를 응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기술과 판매 등에 대해서는 선진독농가나 응용기술 연구자, 또는 일선의 현장의 유통종사자들로 하여금 가르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농업대학이 비교적 많은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임.
 - 또한 농업농촌연구소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잘 해결하고 있는 경우를 찾아내어 보급이 가능한 표준화된 기술로 발전시키고, 현장애로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와 경험이 교과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서 농업현장을 중심으로 교육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셋째, 한국농업대학은 졸업 후 반드시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 것이 다른 대학들과 다르며, 이 때문에, 한국농업대학은 졸업 후 6년간 영농종사 여부를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외에, 졸업생들이 농장을 자립적으로 경영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음.
- 영농기반이 충분하고,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어 부모로부터의 농장승계가 진행 중인 경우는 요구가 있을 때에 컨설팅이나 지도를 하고, 영농기반이 취약하여 정착에 어려움이 많은 졸업생에게는 다양한 시범사업이나 보조사업 등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지도하며, 교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학협력단의 전문컨설팅 팀과 대학 내의 창업보육센터도 졸업생 지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특히 한국농업대학 교수들은 졸업생 농장에 대한 지도와 2학년 과정인 장기현장실습에 대한 현장지도를 통해서, 항상 현장과 접하고 있고, 많은 교수들이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들에 대한 ‘보육닥터’를 담당하는 등, 현장과 강의실간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우리고 있음.
 - 또한 졸업생들은 보다 완벽한 창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보육업체로

입주(혹은 비입주)하여 지도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농업대학을 졸업하고도 창업준비가 더 필요할 경우 창업보육센터에서 지도와 보육을 더 받을 수 있어서 마치 대학졸업으로 부족한 것을 대학원에 진학하여 채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4. 교육·훈련의 단계와 구성

- “농장을 경영하는 전문농업경영인”이란 “농장경영인(경영주)”를 말하며, 부모로부터의 단순한 경영승계를 통해서 곧바로 “농장주”가 되거나 창업 지원자금을 받아서 곧바로 농장을 창업하는 것 보다는, 이에 앞서서 우선 “농업기술자”가 되고, 거기에 더하여 ‘농장경영인’으로 양성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특히 우리나라 농장들의 대부분이 ‘가족경영농장’이기 때문에, 농장주는 농업기술자 뿐만이 아니라 농장경영주로서의 역량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임.
- 따라서 한국농업대학은 가장 먼저 농장의 영농작업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농업기술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2단계는 농장의 성장 및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농장 일을 계획하고 농업기술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점검하며 농장을 이끌고 꾸려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농장주, 즉 “전문 농업경영인”을 목표로 하고, 3단계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농업과 농촌(지역사회)을 선도할 수 있는 “선도농업인”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물론 정확한 구분은 어렵지만, 대체로 1~2학년의 교육·훈련은 “농업기술자”로서의 실력과 능력, 자질을 갖추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2~3학년 과정은 “농업경영인”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3학년 과정에서는 “선도농업인”으로 지역사회의 지도층으

로서의 지도력과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따라서 1학년 과정은 농업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는 농업전문용어와 농업생산의 기초원리(생육생리, 번식생리, 개화생리, 병리 등)와 이의 기초적인 적용, 일반적인 농기계의 운전 등과 같이, 주로 “농장 안에서 행해지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과목들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음.
- 또한 이어서 2학년의 10개월간의 장기현장실습을 통해서 이러한 기초 이론과 원리들이 경영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 내지는 응용되고 있는지를 농장에서 파악하고 체험하고 연습하도록 함으로서 “농업기술자”로서의 교육의 일차적인 마무리가 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함께 2학년의 장기현장실습 과정은 “농업경영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시작단계로, 실습농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실습농장의 농장주(한국 농업대학의 ‘현장교수’로 위촉된)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지도를 받도록 함으로서, 일하면서 배우도록(Learning by doing)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제동행’의 교육·훈련을 통해서, 농장주가 농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농장근로자들을 어떻게 다루고, 농장의 모든 가용(可用)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농장을 어떻게 꾸려 가는가를 경영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배우도록 하는 것이고, 이는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경영수업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수단이며,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많은 것을 알고 느끼면서 이해하게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질문과 문제의식도 생기게 됨.
- 이러한 질문과 문제들은 3학년이 되어 학교로 돌아온 다음에 토론식 수업을 통해서 다른 경험을 한 동료학생들과 교수님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가도록 하고 있다.
- 3학년 과정은, ①1학년과 2학년 과정에서의 “농장 안에서 행해지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을 보완하고, 졸업 후 자신이 실행에 옮길 「창업(승계)설계서」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졸업논문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②농장경영에 있어서의 주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농장 밖에서 얻어야 하는 체험과 지식과 정보”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정착예정지의 농업관련기관 실습, 유통현장 견학, 주요 농업정책과 제도 소개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으며, ③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고, 지역사회를 주도하는 지도층으로서의 “선도농업인”이 갖추어야 할 지도력과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데도 중점을 두고 있음.

- 이상에서와 같이, 학문탐구와 지식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4년제 대학들과는 달리, 한국농업대학은 「전문농업경영인」이라는 농업경영 현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3년제 국립 전문대학으로, 「농업기술자(농장근로자)」→「농업경영인(농장경영주)」→「선도농업인(지역 리더)」에 이르는 단계별 육성목표를 설정하고, 각각의 육성목표 달성을 위한 교과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5. 교과의 구성

□ 기본구성

- 한국농업대학은, 기본적으로 ①미래사회에 대한 대비와 ②투철한 직업의식과 현장중심의 지식·기술·경영능력 및 국제적인 안목을 갖추고, ③농업 및 농촌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농업경영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과 자질과 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과목들로 구성하고, 한국농업대학은 우리 농업의 미래가 ① 더 세계화되고, ② 더 지식정보화되고, ③ 더 전문화될 것으로 보고, 바로 이 3가지 변화를 수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교육하고 있음.
- 또한 농업은 머리뿐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도 배워야 하기 때문에, ①캠퍼스 안의 강의실과 실험·실습실에서는 수업과 실험·실습, 토론 등을 통해서 이론과 기초를, ②농업현장에서는 체험을 통해서 생산-유통-관련기관/

단체의 현장을 배우고, ③전교생에게 의무화되어 있는 기숙사 생활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질서, 희생, 양보, 책임, 권리 등의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인격 형성의 시민교육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우리 대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에 있고, 이는 졸업생들이 농장을 성공적으로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농업대학의 교육·훈련이 맡아주어야 할 범위가 이들이 졸업한 이후에 독립적으로 농장을 꾸려갈 수 있는 “자립경영”에 이를 때까지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으며, 한국농업대학은 졸업 후 최소한 6년(재학기간의 2배 기간) 이상 반드시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으며⁸, 이 기간 안에 ‘자립경영’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도록 지도하고 지원하고 있고, 이러한 “졸업 후 지도”는 한국농업대학이 다른 대학들과 다른 점 중의 하나이며, 동시에 한국농업대학에 대한 농업 현장의 요구이기도 하다고 생각함.

- ①「농업경영 현장」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 ②학교와 현장과 기숙사에서 배우며,
- ③횡적으로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전문화」를 감당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 ④종적으로 「농업기술자(농장근로자)」→「농업경영인(농장경영주)」→「선도농업인(지역 리더)」에 이르는 단계별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교과 구성

- 한국농업대학의 교과목은, 편의상 ①강의와 토론, 강연 등을 통해서 배우는 교과목과, ②상당한 연습을 통한 숙달이 필요한 교과목, ③현장을 보고 실체와 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교과목, ④현장체험이 필요한 교과

⁸ 이를 어길 경우는 그동안 지원된 학비와 기숙사비 일체를 반환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경우는 현역으로 입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함.

- 먼저 강의와 토론, 강연 등을 통해서 배우는 교과목은, 1학년과 3학년 때 주로 강의시간표에 편성하여 매주 정기적으로 수업하고, 필요한 견학도 그때그때 병행하고 있음.
 - 교육성과 측면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과목은 「코스교육」의 형식을 택하고 있는 바, ①‘농기계 코스교육’은 트랙터와 경운기 같은 공통적인 농기계의 조작연습을 위한 ‘공통농기계 코스교육’과 콤바인, 이앙기, SS-분무기, 선별기, 수확기 등과 같은 전문 분야별 농기계에 대한 ‘분야별농기계 코스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고, ②유통 코스교육은 유통현황, 유통정책, 유통개선, 현장견학 등을 내용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유통교육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③자신의 정착 예정지 시·군청,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시·군 지부 등에서 일을 도우면서 배우고 익히는 ‘농업관련기관실습’은 3학년 여름방학 중에 1주일간 실시함으로써 졸업 후 정착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지식의 보급·전달보다는 직업인으로서의 사람을 양성하는 정규 직업교육대학으로는 한국농업대학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에 가장 적합한 교과과정을 찾아내고 정착시키는 일은 “개척적(開拓的)”이어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한국농업대학의 교과편성은 꾸준한 개선과 보완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거의 매년 교과편성이 바뀔으로써 “안정적인 교과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부작용을 함께 경험해야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만족할 만한 교과과정이 찾아졌다거나, 이제는 이 교과과정을 정착시키고 내실을 기하면 된다고 평가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동안 한국농업대학에서 시도했던 다양한 교과편성을 일일이 소개하는 것보다는 현행의 교과편성을 중심으로 먼저 설명하고, 이와 다른 편성을 했을 때의 상황과 생각들을 부차적으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함.

- 2005학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과편성은 현행의 교과편성은 기본적으로 ‘교양과목’-‘공통과목’-‘전공과목’의 3가지 구성되어 있고, 전공과목은 또 다시 ‘기초’와 ‘심화’로 나누고 있으며, 이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괄호는 개설과목수).

표 1. 한국농업 대학의 교과 편성

구 분	필 수(41)	선 택(120)	
교양 (14)	컴퓨터 정보기술, 농촌생활과학, 농업철학, e-비즈니스, 외래특강 등 5과목	PC응용 소프트웨어 활용, 결혼과 가정, 대학국어, 사물놀이, 사회체육, 영어(중급, 고급), 일본어(초급, 고급) 등 9과목	
공통 (44)	농기계, 수확후 처리, 농업경영, 농업조직론, 영농설계, 농공설비, 친환경농업론, 농산물유통 코스교육, 농업관련기관 실습, 등 9과목	세계화와 농업, 부동산관리론, 농촌관광학개론, 농촌관광 계획론, 농촌관광경영론, 농기계경제적 이용, 가축인공수정, 작물보호, 농업공학, 작물·원예 농산가공, 농업과학 기초, 농업법률, 농촌사회복지론, 농촌생태계획론, 플라워디자인, 천연염색, 아로마치료, 건강보조식품, 조사료 생산이용, 국민경제와 농업, 세무상식, 창업설계, 벤처농기업창업론, 조직배양, 작물육종, 종자생산관리, 수경재배, 농업정책론, 소비자행동론, 농촌사회지도자론, GAP, 농업회계, 농산물유통현장실습, 농촌관광현장실습, 수확후처리실습 등 35과목	
전공 (103)	기초 (60)	농학개론, 재배원론, 작물보호, 작물생리, 가축생리, 가축위생, 유통 등 25과목	수도작, 전작, 약·특작, 농산버섯, 조경생산관리 등과 이들의 실습과목 등 35과목
	심화 (43)	창업세미나, 창업논문지도 등 2과목	수도작 심화, 전작 심화, 약·특작 심화, 농산버섯 심화, 조경생산경영 심화 등과 이들의 실습과목 등 41개 과목

- 현행의 161개 교과목(필수과목 41개와 선택과목 120개)에 이르는 매우 다양하고 방대한 과목 설정은,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충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과목들이 수강신청 미달로 실제로 개설·운영되지 못하여 강사섭외와 강의실 확보·편성 등이 매우 어렵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음.
- 한국농업대학의 학교 내의 교과편성은,
 - 농학보다는 농업을 현장중심으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실기교육의 비중이 높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3년의 교육기간 중에서 2학년 1년간을 농장에서 실습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미 실기·실습의 비중이 1/3에 이르기 때문에, 작물 및 가축의 번식생리, 개화생리, 생육생리, 병리, 가축영양 등의 기초원리에 대한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 특히 “기초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경영현장에서의 상업적인 기술과 재배 및 작업요령 등은 끊임없는 기술진보에 의하여 ‘신기술’이 끊임없이 보급되지만, 그 신기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여건에 맞도록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한국농업대학의 정규교육과정은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데 충실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에 더하여 현장에 대한 이해와 응용을 보완하고, 그때그때 개발된 신기술을 전파하고 보급하는 교육·훈련은 비정규교육과정으로 ‘기술보급’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 세계화에 대비한 교과

- 세계화에 대비한 가장 핵심적인 한국농업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은 전교생의 『해외연수』지만, 이외에도 2학년 과정인 10개월 이상의 장기현장(농장)실습을 외국의 선진농장에서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매년 50명 내외의 학생들이 5~6개국의 외국 농장에서 1년 가까이 거주하면서 농장실습을 하도록 해오고 있음.

표 2. 연도별 국외장기현장실습 현황

연도	계	일본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네덜란드	독일
계	397명	87	143	44	25	52	4	32	7	2	1
'98	3	2	1	-	-	-	-	-	-	-	
'99	26	8	18	-	-	-	-	-	-	-	
'00	39	8	11	15	1	-	4	-	-	-	
'01	67	10	20	20	7	2	-	8	-	-	
'02	48	11	11	8	7	1	-	10	-	-	
'03	48	12	23	-	3	-	-	10	-	-	
'04	48	12	16	-	3	11	-	4	2	-	
'05	36	8	13	-	3	12	-	-	-	-	
'06	33	8	11	-	1	9	-	-	3	1	
'07	49	8	19	1	-	17	-	-	2	1	1

○ 해외연수는, 2학년 과정의 모든 재학생이, 1~2주간 외국의 선진농장을 비롯하여 농업관련기관과 단체 등을 방문하여 견학·연수하는 교과과정으로,;

- 1~2주간의 짧은 기간과 언어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선진국의 농업기술을 배우거나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할 수는 없지만, 세계가 넓고, 다양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하고, 선진국의 농업을 직접 보고 접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미래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고 스스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해외연수를 위하여 한국농업대학에서는 매년 2억 4천만 원(학생 1인당 100만원씩)의 예산을 확보하여 왕복 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 200만원 정도인 1인당 연수비용의 약 절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은 자부담으로 충당하는 셈인데, 거의 모든 학생들이 2학년의 장기현장실습을 통해서 실습농장으로부터 매월 받는 실습용돈으로 자부담 100만원 정도는 큰 어려움 없이 충당하고 있음.

- 그러나 몇몇 선진국의 몇몇 현장을 돌아보는 것만으로 세계적인 경제와 농업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조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세계화와 현대농업」이라는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교과

- 정보화 시대에 뒤지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①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고, ②WP, Windows, Excel 등의 기본적인 S/W는 물론, 농장경영 및 영농기술에 관한 다양한 S/W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③전산망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④자신의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⑤전자상거래와 같은 e-business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여야 함.

- 한국농업대학은 「컴퓨터 정보기술」, 「PC응용 소프트웨어 활용」, 「e-비즈니스」로 나누어 1학년 1학기과 2학기에 각각 수업하고 있고, 이 과목들은 컴퓨터를 조작하고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실기 능력(實技能力)이 갖추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모든 수업을 「전산실습실」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주당 2시간씩의 수업만으로는 실기 능력을 획득하는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연습과 숙달을 위하여 매주 3건 이상의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여 요약한 보고서를 e-mail로 제출받는 등, 상당한 Report와 과제물들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농업분야의 S/W가 다양하지 못하고, 그나마 보급되고 있는 S/W들도 이용현장(농장)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신뢰가 쌓였거나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특히 농장이 장부를 기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원가를 계산하고 경영성과를 분석하는 전산프로그램이 매우 절실하지만, 우리 현실에 적합한 이렇다 할 농장회계 프로그램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고, 농협의 척척박사 프로그램, 민간업체인 (주)아이아그로(iAgro.Inc)의 농업경영종합관리 프로그램 등이 보급되고 있으나 농장경영의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내용도 불안한 실정이고, 여기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직까지 통일된 농업회계기준을 마련하

지 못하고 있고, 농업회계와 농업경영, 전산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한 합동연구가 활발하지 못한다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장의 회계결산과 경영성과의 분석 등은 갈수록 중요하고 불가피할 것이고, 차세대 농업인들은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의 활용과 사용법을 가르쳐야 하는 한국농업대학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각별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함.
- 특히 한국농업대학은 「졸업 후 성공적인 영농종사」를 목표로 하고, 이는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필요로 하며, 이는 또다시 ‘끊임없는 농장경영 성과의 결산과 분석’을 근거로 한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농업대학 졸업생들이 통일된 기준과 작성요령에 따라서 장부를 기장하고, 학교에서는 이를 입력-집계-결산하고, 졸업생 농장들 간, 혹은 표준성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개선 목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매년 반복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독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consulting-system)과 도구를 갖추어야 하고, 한국농업대학의 「농장경영 컨설팅시스템」은 최소한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이러한 중장기적인 과제 외에도, 아직은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선진농장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S/W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강좌의 개설이 필요하고, 전산 관련 교과목이나 수업시간을 늘리기 어렵다면,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과외 수업으로 12시간짜리, 20시간짜리 등의 과정(코스교육)을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전문화에 대비한 교과

(1) 생산의 전문화

- 먼저 생산기술의 전문화를 위한 한국농업전문학교 교과목의 특징은, 작물의 품종, 파종, 육묘, 토양과 관배수 및 시비, 병해충과 방제, 생육조절, 작물 관리, 수확 등의 일련의 생산과정을 ‘통합교과’라는 하나의 과목으로 묶

어서 가르친다는 것으로, 학문분야별로 나누어 가르치지 않고, 상품(商品), 즉 작물별로 통합하여 가르친다는 것이고, ‘통합교과’는 주당 1일씩(1학년 8시간, 3학년 6시간) 편성·운영하는 방식으로,;

- 계속수업으로 강의와 실기·실습을 병행하기가 쉽고, 수업분위기가 산만하지 않고 집중적이며, 부득이 캠퍼스 밖에서 진행되는 견학과 실습에 있어서도 효과적이라는 이점이 있지만,
- 강의시간표의 편성과 조정은 그만큼 어렵고, 그보다 더 큰 단점은 한 과목의 수업을 여러 교수(혹은 시간강사)가 진행하는데 따른 부작용들로, 몇 차례의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거론된 부작용들은, 예컨대 수업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똑같은 주제에 대하여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설명하고 주장하는 바가 다를 때도 많아서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할 때가 있다는 것으로, 바꾸어 말하면, 결과적으로 과목 안에서 다루어야 할 여러 주제(Subject)들을 ‘단계별로’ 가르치기 보다는 ‘교수별로’ 가르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수들 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조정이 없을 효과보다는 혼란이 야기될 위험성이 크다는 한계가 있었음.
- 또한 기초이론과 응용기술의 체계적인 연계와 균형 유지는 농업을 포함한 모든 직업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기본원리와 기초기술을 바탕으로 응용기술을 배워야 하므로, 1학년의 ‘통합교과’는 기본원리와 기초기술을 가르치고, 3학년의 ‘전공심화’는 응용기술을 가르쳐야 하고, 1학년의 기본원리와 기초기술은 본교 교수들이 직접 담당하고, 수업방식은 기본원리와 기초기술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강의식’ 수업의 비중이 더 커야 하지만, 3학년의 응용기술은 주로 연구(혹은 생산)현장의 전문가들이 시간강사로 출강하여 담당하도록 하고, 특히 응용기술은 2학년 1년간의 생산농장에서의 실습을 통해서 이미 상당한 체험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질문’과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며, 3학년이 되어 학교의 강의실로 돌아와서는 농장실습을 하면서 가졌던 의문과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토론

식’ 또는 ‘질의응답식’ 수업의 비중이 커지고, 특히 3학년 과정은 졸업
을 앞두고 창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질문’이 가장 많
고, 또 ‘질문에 대한 해답’이 가장 절실할 때라는 점에 수업의 중심이 맞
춰져야 함.

- 우리는 지금껏 기존의 농업계 대학 졸업자들이 거의 농장경영에 뛰어들지
않고, 농사일도 서투른 것을 칠판에서 이론 중심으로 가르쳤기 때문이라
고 생각해왔고, 그에 대한 반성은 “농업은 ‘몸으로’ 배우게 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게 했다고 할 수 있지만, ‘몸으로 배운 것’만으로 성공한 농업인
은 없으며, 가끔은 어느 날 갑자기 성공사례로 소개된 사람이 훗날 특별
할 것이 없었던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는 저 깊은 밑바탕의 튼튼한 기초로부터가 아니라 “반짝”
스쳐가는 바람을 잠깐 타올 뿐이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응용기술의 기초가 되는 기본원리와 기초기술이 튼튼하지 못하면, 빠르
게 발전하는 새로운 응용기술을 제대로 수용하기 어렵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발전을 기대할 수도 없지만, 기본원리와 기초기술이 튼튼
하면 새로운 기술의 적용, 사용, 혹은 작동요령과 기능에 대한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그의 수용이 가능하고, 간단한 고장이나 불편한 일이 생
기더라도 쉽게 극복하고, 때로는 불편한 부분을 직접 개선하고 발전시
킴으로서 농가 스스로가 기술진보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우
리 졸업생들이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일은 불가피함.
- 이 외에도 2003학년도부터 농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경
우,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자격증 취득을 의무
화 하거나 이를 위한 별도의 과정을 운영하지는 않고 있음.

(2) 경영 및 판매분야의 전문화

- 경영 분야는 1학년 2학기의 ‘농업경영’과 3학년 1학기의 ‘농업회계’로 각
각 주당 2시간씩으로 되어 있고, 창업설계와 관련된 과목들이 투자수익성

계산, 현금흐름 추정, 생산비 계산 등과 같이 농업경영을 기초로 한 응용 단계로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음.

- 유통 분야는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학과별(상품류별(商品類別))로 주당 2시간씩 ‘농산물 유통’을 교육하고 있고, 농수산물유통공사 교육원에 의뢰하여 4박5일간의 합숙교육을 ‘코스교육’ 형태로 실시하고 있으나, 농산물 수급이 원활해야 하는 ‘유통(流通)’이라는 관점보다는 생산자인 농가의 입장에서는 ‘농산물의 원활 수급(유통)’보다는 우선 ‘농산물을 제값에 잘 파는 판매(販賣)’가 훨씬 더 절실하기 때문에, 한국농업대학은 ‘판매전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함.

- 특히 농장경영주 양성이 목적인 한국농업대학은 농산물의 판매(혹은 유통)현장을 제대로 알고 체험하도록 교육해야 하는 바, 개교 초기(1기가 3학년이었던 1999년)에, 서울 양재동의 농협 하나로마트와 양곡도매시장,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 충남 천안의 중부물류센터와 같은 농산물 유통현장에서 1주일간 실습을 하도록 하여, 농산물이 어떻게 유통되고 취급되며, 소비자들의 각각의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어디에 있고, 구매 행태나 습관이 어떤지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었고, 이들은 새벽부터의 경매나 상하차 등의 결코 쉽지 않은 일을 하는 유통인들의 땀흘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으나, 원활한 유통현장 실습을 위해서는 섭외와 협의, 조정 등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학생들을 출퇴근시키고 식사문제를 해결 등의 기획과 준비과정이 매우 번거롭고 어려워 워서 지속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유통실습을 할 수 있는 업체도 3~4년 전에 비하여 더 많아졌고, 유통현장에 대한 이해와 체험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특히 유통업체들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역할과 기능, 활동, 그리고 농가들로부터 비롯되는 불합리한 문제들과 애로를 보여주고 체험하도록 함으로서 자신들에게 농산물을 납품할 미래의 고객을 미리 사귀고 설득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거나 일방적인 시혜적 태도로 일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유통기관 실습

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업체 실
습은 다시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장기현장실습

- 2학년 과정인 장기현장실습은 학교의 3년 교육과정의 핵심적 과정으로 3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바,;
 - 하나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장을 꾸려 가는 생산 및 경영현장인 농장
에서 행해지는 영농작업에 직접 참여토록 함으로서, ‘숙달’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는지’를 알도록 하여 실천력을 갖추도록 하고,
 - 다른 하나는 경영현장의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인식하도록
하고, 현장교수들이 이를 해결하는 탐구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태도, 즉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과정, 방법, 요령 등을 가까이서 보고 배우고 익히
도록 하고, 특히 경영현장에서 얻어지는 많은 질문들을, 학교수업이 행해
지는 3학년 과정에 돌아와서 학교 교수들과 함께 해결하도록 함으로서
수업현장과 경영현장을 하나의 「교육현장」으로 묶는다는 것이며,
 - 세번째는 실습농장의 경영주인 현장교수의 인격과 철학과 생활태도 등
을 가까이서 보고 배우도록 함으로서, 농장을 경영하고, 지역사회에서
선진적이고 선도적인 위치에서 활동하고, 한 가정을 이끌어 가는 미래
의 인격체로서의 자질과 인격을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의 많은 실습과정은 교육을 마무리하는 졸업 직전의 마지막 과정
으로 행해지고 있는 바, 이는 마치 일선의 현장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
운 데로 작동되거나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과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서 그의 효과가 크지 못하기 때문에, 학문으
로서의 농학(農學) 보다는 직업으로서의 농업(農業)을 배우는 데는, 먼저
‘있는 그대로의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무
엇이고 그것을 개선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
가를 찾는 순서로 교육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

을 바탕으로, 학교교육(1년) → 현장실습(1년) → 학교교육(1년)으로 장기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의 중간에 편성하고 있음.

- 또한 장기현장실습이 1년이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4계절이 매우 뚜렷하여 농장경영의 한 주기(週期)를 1년으로 해야 하고, 매일같이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농장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관리와 작업이 각각 다르기 때문임.

덴마크의 농업전문대학은 2년제와 5.5년제가 있고, 2년제는 농업에 종사할 사람을 양성하는 과정(기술인력 양성과정)이고, 5.5년제는 자영농가, 즉 농장 경영주를 양성하는 과정(Owner 양성과정)이며, 5.5년제를 마치면 ‘그린카드(Green Card)’를 발급받아 30ha 이상의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짐. 농장 경영주를 양성하는 5.5년제는 방학을 제외하면, 학교교육(2개월) → 농장실습(12개월) → 학교교육(18개월) → 농장실습(6개월) → 학교교육(14개월)으로, 전 교육과정을 통해서 1년 짜리와 반년 짜리 현장실습이 각각 한차례씩 들어있음.

또한 지금은 없어졌지만, 1968년에 설립된 일본 농림수산성 산하의 농업자대학교는 학교교육(15개월) → 파견(派遣)실습(6개월) → 학교교육(2개월) → 해외연수(1개월) → 학교교육(1개월) → 재택(在宅)실습(2개월) → 학교교육(5개월)으로 학교와 현장을 각각 3차례씩 오고가는 교과과정을 운용했으며, 여기서 「파견실습」이란 선진독농가의 농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배우는 한국농업대학의 「장기현장실습」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해외연수(자부담)는 미국, 혹은 프랑스의 농장에서 1개월 정도 머물면서 실습하는 것을 말하며 참여 여부는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자유의사지만 거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2개월간의 「재택실습」은 자기 집에서 하는 실습을 말함.

- 장기현장실습은 학교에서 위촉한 현장교수(실습농장 경영주)가 실습생을 직접 지도하고, 한 농장에 1명, 많아야 3명 이내의 학생이 배치되어 실습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지도」 방식이며, 현장교수는 실습의 성과와 태도 등을 관찰하여 평가하고, 실습 종료 후의 보고서 등을 평가하여 학기당 20학점씩 총 40학점을 취득하도록 해왔으나,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한계를 경험하여, 2005학년도부터는 학기당 5과목씩 모두 10

과목⁹으로 나누어 각각의 과목에 대한 실습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무엇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배우고 정리하여야 할 것인가를 명확히 했고, 평가는 실습기간 30점, 실습일지와 교과별 보고서와 현장교수 평가서에 대한 평가 각 20점, 학교소집교육 참석 10점 등,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음.

- 졸업생들은 졸업 후 창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장기현장실습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현장인 「농장」에서 해야 하고, 교육적이고 진지한 실습분위기를 위해서 실습농장은 실습생의 집이 있는 지역(시·군)내에 위치하지 않는 농장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농장(自己農場)이나 가까운 인척의 농장, 동일한 거주지역 내의 농장에 배정하되, 그의 인정여부와 허용범위는 장기현장실습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으며, 농산물 생산현장인 농장 이외에서의 실습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지만 장기현장실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현장실습기간(10개월 이상)의 일부 기간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
- 「장기현장실습위원회」는, 아직은 충분한 자료나 경험이 부족하여 예기치 못한 사태나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예기치 못한 일들을 그때그때 협의하고 토의하여 합리적인 해법을 찾고, 이러한 경험과 사례를 축적해가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과를 대표하는 교수들과 국외 장기현장실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가별 담당교수들로 구성되며, 장기현장실습의 틀과 기본적인 원칙들을 정하고(장기현장실습규정), 이 규정들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9 ①농업경영(축산경영)계획실습, ②재배환경(가축사육환경)실습, ③생력재배(가축사양기술)실습, ④병해충방제(가축위생)실습, ⑤재해대책실습(오폐수정화), ⑥지역사회개발실습, ⑦출하조절(축산부산물처리)실습, ⑧GAP(축산물)품질관리실습, ⑨농축산물 유통판매실습, ⑩농장경영진단실습

□ 창업설계

- 창업설계는 2학년 과정인 장기현장실습과 함께 한국농업대학의 교과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과 중의 하나로, 졸업 후에 영농종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졸업 전에 정하고 계획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함.
 - 창업설계는 전문학사 학위청구논문, 즉 ‘창업계획서’라는 이름의 졸업논문으로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해야 졸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창업설계 교과는 졸업 후 창업, 또는 승계 등에 의한 제2의 창업을 위하여, ①자신들의 창업계획을 스스로 작성하고, ②창업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과목으로, 논문작성의 과정과 요령, 자료의 수집과 평가, 수익성 분석,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의 수립방법 등을 가르치는 「영농설계(3학년 1학기)」와, 작성된 논문을 1차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하고 질문을 받고 수정·보완하는 과목으로 「창업세미나(3학년 2학기)」, 그리고 작성된 논문을 심사하는 「창업논문 심사(3학년 2학기)」의 3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업계획서 작성을 보다 깊이 있게 지도하기 위하여, 예측과 기획, LP 등과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계획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창업설계」를 선택과목으로 제공하고 있음.
 - 창업설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는 바, 1단계(준비단계, 3학년 1학기 전반기(중간고사 이전)까지)는 ①창업계획 수립의 절차와 단계에 대한 이해와 기초지식, ②창업계획 사례(혹은 가상 창업계획)에 대한 해석과 이해, ③창업의 목표와 기본 틀(구상) 및 창업계획의 범위 설정, ④기초 자료의 수집과 창업계획의 대강 결정, ⑤필요한 관련 자료의 선정과 자료 수집을 위한 계획수립이 이루어지고, 2단계(자료수집 및 계획수립단계, 3학년 1학기 후반기(중간고사 이후)부터 여름방학 때까지)는 ①관련 자료의 획득과 가공 및 자료이용의 한계와 적절성 검토, ②창업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가자료의 획득, ③기본계획과 부문별 계획(농장의 입지/설립, 생산/판매, 투자, 자금운용 등)의 일치를 위한 수정 및 조정, ④이해 당사자(부모와 가족, 동업/협력자, 관련기관 등)들과의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3단계(계획 확정단계, 3학년 2학기)는 ①계획 시안의 발표/설명과 토론 및 검토, ②계획 시안의 수정/보완/확정, ③정책 및 금융지원, 인허가 신청을 위한 협의 및 계획서 작성, ④세부실행계획 작성의 순으로 진행되며, 창업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생산기술 부문, 투자가 계획된 기계 및 설비 부문, 투자수익성 등의 경영 부문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3인 이상의 심사위원 심사를 통과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창업계획서를 일체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자신의 창업계획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졸업논문으로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계획에 대한 실행 정도에 의한 평가에 못지않게, 웬만한 “계획”은 스스로 따져보고 계획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과정임.

□ 졸업 후 지도

- 한국농업대학은 졸업생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수지도를 통해서;
 - 한편으로는 졸업생의 영농정착을 지원하여 정예의 전문농업경영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현장에 대한 졸업생 지도를 통해서 얻는 지식과 경험을 학교교육 활용하는 feedback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졸업생지도위원회」로 하여금 영농정착에 대한 지도와 지원, 학비상환조건 이행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졸업생 사후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졸업 후 지도가 중점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중점지도기간’은, ①“졸업생의 「자립경영」이 가능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②학비지원조건 이행이 의무화되어있는 기간인 “졸업 후 6년(병역 미필자는 9년)까지”로 하고 있으며,
 - 졸업생의 처지와 필요에 따른 눈높이 지도를 위하여, 특별지도, 중점지

도, 일반지도의 3가지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음.;

- ①특별지도는 창업기반이 빈약하거나 영농종사 의지가 약해서 영농정착을 망설이고 있는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①본인은 물론 그 부모와의 상담이 필요하고, ②해당지역 농업기술센터와의 협의를 거쳐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모색하고 지도하고 있음.
- ②중점지도는 이제 막 창업을 했거나 자영을 시작한 졸업생중 종합적인 컨설팅을 요청한 경우를 대상으로, ①농장의 생산기술에서 경영, 농산물의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농장경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와 컨설팅이 필요하고, ②정례화된 주기적(週期的)인 지도 및 컨설팅이 필요하므로 사전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③이러한 지도는 매년 대상을 달리할 뿐 그의 방법과 과정이 거의 매년 반복되는 특징을 가질 것이므로 「창업 인큐베이터(가칭)」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며, 「창업 인큐베이터(가칭)」는 농업경영, 농기계, 영농시설, 수확후 처리, 농업전산정보, 환경농업의 6개 분야 담당교수와 해당 품목의 생산기술을 담당하는 교수가 참여하여, 창업계획 → 창업 → 자립경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고자 함.
- ③일반지도는 스스로 자영을 하고 있거나 부모의 지도와 보호아래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졸업생으로 부분적인 컨설팅을 요청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나 부모의 요구가 있는 분야에 대한 지도와 컨설팅으로 제한하고 있음.

- 졸업생에 대한 집합교육은 졸업 후 2년이 지난 다음부터 실시하고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술연수과」가 작목별, 기술별 등으로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개설·운영하고 있음.

□ 3+1 심화과정

- T/F팀이 7월 말을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6. 졸업생의 영농정착실태

표 3. 지역별 일반농가와 졸업생 구성비

지역별	2005년 6월말 기준			2006년 6월말 기준		
	농 가 수 ¹⁰ (A)	졸업생수(B)	A / B	농 가 수 ¹¹ (A)	졸업생수(B)	A / B
합 계	1,240,406(100.0)	1,235(100.0)	1,004.4	1,245,083(100.0)	1,442(100.0)	863.4
서울 · 경기 · 인천	158,479(12.8)	268(21.7)	591.3	152,230(12.2)	331(23.0)	459.9
강 원	75,154 (6.1)	102 (8.3)	736.8	77,742 (6.2)	119 (8.3)	653.3
충 북	83,890 (6.8)	84 (6.8)	998.7	86,984 (7.0)	99 (6.9)	878.6
충남 · 대전	166,678(13.4)	158(12.8)	1,054.9	170,031(13.7)	177(12.3)	960.6
경북 · 대구 · 울산	235,582(19.0)	172(13.9)	1,369.7	234,330(18.8)	198(13.7)	1,183.5
경남 · 부산	157,690(12.7)	117 (9.5)	1,347.8	160,916(12.9)	132 (9.2)	1,219.1
전 북	117,762 (9.5)	123(10.0)	957.4	118,906 (9.6)	138 (9.6)	861.6
전남 · 광주	208,803(16.8)	193(15.6)	1,081.9	207,477(16.7)	231(16.0)	898.2
제 주	36,366 (2.9)	18 (1.5)	2,020.3	36,465 (2.9)	17 (1.2)	2,145.0

10 통계청의 2005년도 「농림통계연보」

11 통계청의 2006년도 「농림통계연보」

표 4. 졸업연도별 연령별 졸업생분포

구분	합 계	20~25세 (85~81년생)	26~30 (80~76년생)	31~35 (75~71년생)	36~40 (70~66년생)	41세 이상 (65년 이전)
합계	1,442(100.0)	659(45.7)	599(41.5)	152(10.5)	23(1.6)	9(0.6)
		1,258(87.2)				
'00졸	209(100.0)	-	147(70.3)	44(21.1)	10(4.8)	8(3.8)
		147(70.3)				
'01졸	208(100.0)	-	170(81.7)	35(16.8)	2(1.0)	1(0.5)
		170(81.7)				
'02졸	223(100.0)	28(12.6)	156(70.0)	33(14.8)	6(2.7)	-
		184(82.5)				
'03졸	217(100.0)	137(63.1)	62(28.6)	18 (8.3)	-	-
		199(91.7)				
'04졸	186(100.0)	162(87.1)	19(10.2)	5 (2.7)	-	-
		181(97.3)				
'05졸	206(100.0)	174(84.5)	25(12.1)	7 (3.4)	-	-
		199(96.6)				
'06졸	193(100.0)	158(81.9)	20(10.3)	10 (5.2)	5(2.6)	-
		178(92.2)				

표 5. 기별 입학생 및 졸업생 현황

기 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합계
입 학 연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졸 업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입학생 수(A) (명)	240 (11)	240 (16)	240 (24)	238 (19)	233 (18)	232 (19)	233 (20)	1,656 (127)
졸업생 수(B) (명)	209 (11)	208 (13)	223 (22)	217 (20)	186 (13)	206 (16)	193 (19)	1,442 (114)
졸업생 비율 (B/A*100)	87.1 (100.0)	86.7 (81.3)	92.9 (91.7)	91.2 (105.3)	79.8 (72.2)	88.8 (84.2)	82.8 (95.0)	87.1 (89.8)

주: ()은 여학생임.

표 6. 졸업생 영농정착현황

구 분	합계	영농종사자				예비영농자			기 타			
		소계	후계농업경영인		일반농업인	소계	유예	군입대	소계	포기	사고	무응답
			산업기능요원	일반후계농업경영인								
합	1,372 (100.0)	1,305 (95.1)	460 (33.5)	712 (51.9)	95 (6.9)	27 (2.0)	12 (0.9)	15 (1.1)	40 (2.9)	9 (0.7)	10 (0.7)	21 (1.5)
'00졸	139	124	-	109	15	3	3	-	12	7	3	2
'01졸	208	202	1	180	21	3	1	2	3	1	-	2
'02졸	223	216	1	200	15	3	2	1	4	-	2	2
'03졸	217	205	57	134	14	2	1	1	10	1	3	6
'04졸	186	184	134	40	10	2	-	2	-	-	-	-
'05졸	206	191	128	54	9	11	4	7	4	-	1	3
'06졸	193	183	139	33	11	3	1	2	7	-	1	6

주: 2000년 졸업생(1기) 중, 6년 영농종사의무기간이 만료된 70명은 제외됨.

표 7. 영농정착 지도대상별 졸업생 분포

졸업년도	합 계		중점지도		일반지도		특별지도		기타(제외) ¹²	
	2005	2006	2005	2006	2005	2006	2005	2006	2005	2006
합 계	1,235 (100.0)	1,372 (100.0)	793 (64.2)	846 (61.7)	382 (30.9)	460 (33.5)	17 (1.4)	47 (3.4)	44 (3.5)	19 (1.4)
2000졸	209 (100.0)	139 (100.0)	189 (90.4)	78 (56.1)	-	48 (34.5)	1 (0.5)	6 (4.3)	19 (9.1)	10 (7.2)
2001졸	208 (100.0)	208 (100.0)	199 (95.7)	148 (71.2)	1 (0.5)	57 (27.4)	2 (1.0)	2 (1.0)	6 (2.9)	1 (0.5)
2002졸	223 (100.0)	223 (100.0)	211 (94.6)	170 (76.2)	1 (0.4)	46 (20.6)	6 (2.7)	5 (2.2)	6 (2.7)	2 (0.9)
2003졸	217 (100.0)	217 (100.0)	64 (29.5)	148 (68.2)	140 (64.5)	57 (26.3)	3 (1.4)	7 (3.2)	10 (4.6)	4 (1.8)
2004졸	186 (100.0)	186 (100.0)	49 (26.3)	90 (48.4)	134 (72.0)	92 (49.5)	2 (1.1)	4 (2.2)	1 (0.5)	-
2005졸	192 (100.0)	206 (100.0)	81 (42.2)	109 (52.9)	106 (55.2)	80 (38.8)	3 (1.6)	14 (6.8)	2 (1.0)	1 (0.5)
2006졸	-	193 (100.0)	-	103 (53.4)	-	80 (41.5)	-	9 (4.7)	-	1 (0.5)

주: 2006년 결과는 2000년 졸업생(1기)중, 6년 영농종사의무기간 만료자 70명이 제외됨.

12 학비를 상환하고 비농업부문으로 진로를 바꾸거나 사고 등으로 사망한 졸업생 등

표 8. 영농정착 유형별 졸업생분포

학과별	합계	독립경영			부모와 영농	영농취업	무응답 등
		창업	승계	소계			
합 계	1,372(100.0)	221(16.3)	217(16.0)	438(32.3)	743(54.8)	23(1.7)	168(11.2)
식작과	206(100.0)	23(11.2)	45(21.8)	68(33.0)	110(53.4)	2(1.0)	26(12.6)
특작과	239(100.0)	51(21.3)	22 (9.2)	73(30.5)	136(56.9)	3(1.3)	27(11.3)
채소과	209(100.0)	32(16.2)	22(11.1)	54(27.3)	123(62.1)	-	32(10.6)
과수과	212(100.0)	26(12.8)	26(12.7)	52(25.5)	123(60.3)	1(0.5)	36(13.7)
화훼과	242(100.0)	49(20.1)	31(12.7)	80(32.8)	121(49.6)	14(5.7)	27(11.9)
축산과	264(100.0)	40(15.2)	71(26.9)	111(42.1)	130(49.2)	3(1.0)	20 (7.6)

표 9. 출신학과별 전공분야 영농종사 현황

구 분	합계 (평균)	식작과	특작과	채소과	과수과	화훼과	축산과
합 계	1,372 (100.0)	206 (100.0)	239 (100.0)	209 (100.0)	212 (100.0)	242 (100.0)	264 (100.0)
전공분야	642 (46.8)	141 (68.4)	73 (30.5)	96 (45.9)	86 (40.6)	65 (26.9)	181 (68.6)
전공+타분야	344 (25.1)	42 (20.4)	48 (20.1)	57 (27.4)	80 (37.7)	56 (23.1)	61 (23.1)
타 분 야	319 (23.3)	9 (4.4)	105 (43.9)	44 (21.0)	34 (16.0)	108 (44.6)	19 (7.2)
기타 (미응답 등)	67 (4.9)	14 (6.8)	13 (5.4)	12 (5.7)	12 (5.7)	13 (5.4)	3 (1.1)

표 10. 출신학과별 소득수준별 졸업생 분포

구 분	합 계	1천만원 미 만	1~3천만원 미만	3~5천만원 미만	5천만~1억원 미만	1억~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합 계	1,305 (100.0)	34 (2.7)	292(22.4)	326(25.0)	402(30.8)	197(15.1)	54(4.1)
			618(47.4)		653(50.0)		
식작과	193 (100.0)	4 (2.0)	44(22.8)	47(24.4)	74(38.3)	23(11.9)	1(0.5)
			91(47.2)		98(50.8)		
특작과	226 (100.0)	6 (2.6)	56(24.8)	59(26.1)	75(33.2)	27(12.0)	3(1.3)
			115(50.9)		105(46.5)		
채소과	197 (100.0)	7 (3.5)	47(23.6)	50(25.1)	67(33.7)	22(11.1)	4(2.0)
			97(48.7)		93(47.2)		
과수과	199 (100.0)	7 (4.0)	58(29.4)	48(24.4)	62(31.5)	23(11.7)	1(0.5)
			106(53.8)		86(43.2)		
화훼과	229 (100.0)	7 (3.0)	67(29.3)	81(35.4)	52(22.7)	18(7.9)	4(1.7)
			148(64.6)		74(32.3)		
축산과	261 (100.0)	3 (1.1)	20(7.7)	41(15.7)	72(27.6)	84(32.2)	41(15.7)
			61(23.4)		197(75.5)		

표 11. 졸업생의 영농정착유형별 소득분포

구 분		합 계	1천만원 미 만	1~3천 만원 미만	3~5천 만원 미만	5천만~1 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합 계	2006	1,305(100.0)	34(2.7)	292(22.3)	326(25.0)	402(30.8)	197(15.1)	54(4.1)	
					728(55.8)				
독립 경영	소계	2006	438(100.0)	2(0.5)	58(13.2)	155(35.4)	157(35.8)	40(9.1)	26(5.9)
					312(71.2)				
	창업	2006	221(100.0)	2(0.9)	35(15.8)	98(44.3)	80(36.3)	6(2.7)	-
					178(80.6)				
	승계	2006	217(100.0)	-	23(10.6)	57(26.3)	77(35.4)	34(15.7)	26(12.0)
						134(61.7)			
부모협농	2006	677(100.0)	-	76(11.2)	171(25.3)	245(36.2)	157(23.3)	28(4.1)	
					416(61.5)				
영농취업	2006	23(100.0)	23(100.0)	-	-	-	-	-	
기 타	2006	167(100.0)	10(6.0)	157(94.0)	-	-	-	-	

표 12. 용도별 정책자금 활용현황

구 분	합 계	농지구입	시설자금	가축입식	종묘구입	농기계구입	기 타
합계	802(100.0)	341(42.5)	191(23.8)	128(16.0)	5(0.6)	13(1.6)	124(15.6)
식작과	128(100.0)	82(64.1)	19(14.8)	11(8.6)	-	4(3.1)	12(9.4)
특작과	150(100.0)	64(42.7)	48(32.0)	9(6.0)	-	3(2.0)	26(17.3)
채소과	105(100.0)	47(44.8)	30(28.6)	8(7.6)	-	1(1.0)	19(18.0)
과수과	116(100.0)	69(59.5)	18(15.5)	6(5.2)	2(1.7)	2(1.7)	19(16.4)
화훼과	129(100.0)	54(41.9)	36(27.9)	6(4.7)	3(2.3)	1(0.8)	29(22.4)
축산과	174(100.0)	25(14.4)	40(23.0)	88(50.6)	-	2(1.1)	19(10.9)

표 13. 영농정착 애로사항

구 분	2005	2006
합 계	1,784명(100.0)	2,203명(100.0)
자 금 부 족	458 (25.7)	522 (25.8)
농지기반 부족	297 (16.6)	342 (16.9)
기술·경험 부족	307 (17.2)	366 (18.1)
부모와 갈등	181 (10.2)	198 (9.8)
자녀양육	59 (3.3)	62 (3.1)
문화생활	299 (16.8)	337 (16.7)
결 혼	183 (10.2)	196 (9.7)

7. 요약 및 건의

- 한국농업대학은 1997년 개교 후, 2000년 2월 209명의 첫 졸업을 배출한 이래 2006년까지 7년간 총1,442명(이중 여성 11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2006년 6월 말 현재 그중 영농종사의무기간 6년이 지나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70명을 제외한 1,372명의 95.1%인 1,305명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농정착률은 여타의 농업계 대학과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영농정착률에 비하여 월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 영농에 종사할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농업대학은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임.
 - 물론 이러한 양적인 성과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성과, 즉 한국농업대학 졸업생들이, 모범적인 성공을 거둔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자리를 잡았는지에 대한 평가가 남아 있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하겠으나, 비록 부모와 함께 영농을 하는 졸업생의 비율이 54.8%에 이르는 하지만, 졸업생 농장의 농업소득 평균이 5,987만원으로 전국 농가 평균의 1.9배에 이르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임.

-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한국농업대학 첫 10년간은 거의 매년 교과편성을 변경했을 정도로 아이디어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인 교과과정이 운영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지난 4월부터 교과과정 개편 소위원회가 꾸려져서 활동하고 있고, 오는 7월 말까지 새로운 교과과정 안이 제시될 예정에 있음.
 - 이와 함께 3+1의 심화과정과 학교의 조직개편을 위한 T/F팀이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내실을 기하는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선진국의 농업인 재교육

- 나 승 일 (서울대학교 교수)

1. 주요 선진국의 농업인 재교육 정책 사례	102
2. 주요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과 정책과제	117
참고 문헌	121

선진국의 농업인 재교육

- WTO, DDA 협상, FTA 협상 등 급격한 농업시장 개방 하에서 우리나라는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쟁력을 견인할 우수한 농업인력의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움.
- 특히 오늘날 사회 전반이 산업사회에서 지식 및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지식과 정보는 새로운 지식창출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개발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음.
- 그리고 인적자원개발의 중심으로서 농업인 교육기관의 기능을 특성화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정부주도의 농업인 교육훈련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인들이 영농현장에서 갖는 교육훈련의 요구를 밀착 반영하기 위함임.
- 이와 같이 수요자 맞춤형 민간주도의 농업인 교육훈련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이미 정책적 노력을 통해 정착 단계에 접어들어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농업인 교육훈련이 정부 중심의 공급이 아닌 농업인 각각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실제 주요 선진국의 농업인구가 우리나라에 비해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영국, 일본 등은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시대변화에 대응한 농업인 교육훈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전체 인구 대비 농가인구의 비중은 한국 7.3%, 네덜란드 1.4%, 덴마크 4%, 독일 2.1%, 영국 1.7%, 일본 3.2%임.

□ 주요 선진국의 농업인 교육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먼저 대학이 학외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둘째 정부가 농업인 교육에 직접 관여하여 농업교육훈련 조직을 운영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셋째 각 지방정부가 교육훈련 사업의 주체가 되고, 정부에서 일부 보조하는 경우, 넷째, 여러 농업인 단체가 정부의 원조를 얻어 교육훈련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농업인 단체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가지고 교육훈련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이 중 정부가 직접 관여한 농업인 교육훈련은 점차 사라지고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음.

1. 주요 선진국의 농업인 재교육 정책 사례

1.1. 미국

□ 미국의 농업인 재교육은 농촌지도사업(Cooperative Extension Work)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주립농과대학, 미국농무성(USDA), 농업인 단체의 상호협력을 통해 전개됨.

○ 중앙정부(농림부)와 농촌지도기관(농촌진흥청)의 기능이 분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정부-지방자치단체-대학의 지도사업이 일원화되어 있음.

- 농림부의 ARS(Agriculture Research Service) 산하 농생명 관련 연구소를 지역 농학계 대학 내에 설치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 및 교육 활동에서의 대학과 정부기관간 협력 강화

- 미국의 농업인 재교육은 전국 105개 주립농과대학에서 주도하고 있음. 이를 위해 주립대학이 Land Grant College of Agriculture System을 구성하여 운영
 - 주립농과대학 내에 농촌지도국을 설치하여 농업인 교육훈련 실시

 - 아카데미 프로그램(Academic Program), 농업연구기능(Agriculture Research Service), 농촌지도(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등 3개 기능 수행

 - 농학계 대학간 협의체(NASULGC)를 운영하여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 농업경쟁력의 확보, 전문 인력양성, 지식의 창출 및 제공 등 교육, 연구, 농촌지도의 질적 개선 및 관련 정책에 대한 협력적 논의

 - 기술보급을 위한 농촌지도는 농무성의 CSREES와 101개 시군 Extension Center 및 6개 4-H 교육센터가 협력하여 운영

- 주립농과대학의 농업인 재교육 관련 예산은 미국농무성(USDA)의 CSREES (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에서 지원하고 있음.
 - 농업인 재교육을 위한 예산은 연방정부 35%, 주정부 43%, County 19%, 민간보조 3%로 구성됨.

- 농업인 재교육에 필요한 예산의 약 1/3 정도만을 미국농무성(USDA)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주요정책 수립은 주정부와 농무성 간의 공동결의에 의해 이루어짐. 또한, 각 주의 사업계획 역시 농무성의 승인이 필요함.

1.2.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농업발전의 축은 농업인 재교육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업인 재교육은 지속적인 시험연구, 지도활동, 교육의 세 개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교육훈련사업의 지위는 매우 높고, 농업인들의 신뢰 또한 매우 높음.
- 그러나 최근 농축산물의 생산억제, 환경문제 등이 대두되고 농업인과 지도원 간의 괴리발생, 재정상의 어려움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네덜란드의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은 정부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었음.
- 공공중심의 농업인 육성사업이 민간화 된 배경은 ①정부 재정의 압박, ②농산물 과잉에 수반되는 생산제한 등 정책의 변화, ③농가와 지도사업의 관계 변화, ④농가호수의 감소에 따른 농업인의 정치력 저하 등임.
- 전통적으로 정부중심으로만 운영된 네덜란드의 농업인 교육훈련은 1990년대에 들어와 농업정보·지식센터(IKC: Information en Kennis Centrum)와 재편된 공적지도사업(DVL: Dienst Landbouw Voorlichting)에 대해서만 정부가 관여하게 됨.
- 농업지식정보센터(IKC)는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의 민간화에 따라 농업정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며, 정부는 연구, 지도, 교육훈련, 농업인의 연계를 위하여 농업지식정보센터(IKC)의 관리기능만을 담당
 - 예로 ISNAR(International Service for National Agricultural Service)는 농업연구기관의 제도혁신, 연구조직과 고객의 연계, 제도혁신을 위한 국제훈련과정 운영, 정보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개발 등 개발기술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연구에 주력하고 있음.
- 또 다른 예로서 Wageningen Agricultural University는 농업인 교육훈련의

민영화 계획에 따라 농업부의 농업연구청(Agricultural Research Department, DLO)을 흡수 통합하여 ‘교육 + 연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한편, 정부보조를 통해 운영되는 농업인 육성사업으로서 공공지도사업(DLV)는 네덜란드의 농업인 교육훈련 조직 중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에 사무소(26개) 및 지역팀(59개)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음. 주요 활동분야는 품목별 생산, 기술, 경영에 대한 상담 및 문제해결 등 교육훈련 전반을 담당하고 있음.
- 공공지도사업(DLV)는 농가의 실태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초보·숙련·전문과정 등 농업인 수준별 서비스 제공
 - 고등(성인) 농업교육은 계약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교육 프로그램은 특정회사나 개인에 맞는 수준의 교육내용을 제공하고 이수후 관련 자격증 부여

표 1. 네덜란드 정부지원 농업인 교육훈련 정책사업

구 분	내 용
농업지식정보센터 (IK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연구기관 및 공공·민간 교육훈련사업의 연계 기능 담당 ○ 경종·원예분야 농업정보·기술센터와 축산분야 농업정보·기술센터로 구분
공공 지도사업 (DV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대상 기술적·경제적 서비스 담당 ○ 변화하는 환경, 시장조건 대응을 위한 농업인 지원 및 농축산물 품질, 안정성, 경쟁력 확보 ○ 1992년부터 정부조직에서 민영조직으로 전환중(2011년 민영화 완료 계획) -매년 5%씩 정부보조금 삭감

출처: 박문호, 박영구(2004). 유럽 주요국의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의 동향과 시사점, p.93 재구성.

표 2. 네덜란드 ISNAR의 추진과제

구 분	내 용
농업연구 제도혁신 정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연구의 제도적인 혁신을 위하여 국가와 지역 정책을 개발 ○ 농업연구와 지식체계의 변화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제도적인 역할 변화를 모니터링 ○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과학과 기술정책의 개발 및 보급
연구조직과 고객간의 연계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 생산자, 정부, 무역가, 산업가, 소비자 등 고객의 수요에 부응 ○ 연구과제 설정 및 조직 운영에 고객의 참여 촉진
제도혁신을 위한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연구의 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 개발 ○ 리더쉽, 대인 커뮤니케이션, 팀 작업, 기업정신, 갈등해소, 감독, 원격교육, 조직문화 등에 관한 교육훈련 ○ 교육훈련 모듈 개발, 원격교육 프로그램 운영, 출판, 라디오·TV 방송
새로운 기술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공학기술의 환경적 위험성, 연구 우선순위, 투자성과 등 연구 ○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ICTs)의 전략 개발
교차수요 부응을 위한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균형을 유지하는 연구 모델 개발 ○ HIV-AIDS와 말라리아 등 농업과 건강의 연계
농업연구 지원을 위한 기업과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신속하고 비용 효과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 ○ ISNAR 전문가, 세계 연합, 컨설턴트, 대학 컨소시엄, 비정부 조직, 기타 연구 개발 조직간의 협력 강화

출처: 농촌진흥청(2004). 농업지식정보체계(AKIS) 연구동향에 관한 조사, p. 3 재구성.

□ 한편, 네덜란드는 농업인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11개 ‘실습훈련센터’를 통합시켜 5개 PTC+(Practical training Centre)를 설립함. PTC+는 ①새로운 첨단기술 전문가 집단 재교육, ②농과계 학생들의 농업관련 전문 현장 실습 교육, ③농가 및 전문회사의 주문에 의한 전문가 양성 교육, ④신선농산물 친환경생산 기술 전파, ⑤단위 면적당 수확량 증대 및 품질 향상 기술 교육, ⑥농업생산물 표준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주요 교육 분야는 생산, 가공, 장비조작, 포장, 경영, 꽃꽂이, 소매 디스플레이 등 생산부터 소비자판매까지 지역 센터별 현장의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정부의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농업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의 필요성 및 소요 자금의 지속적 확보를 감안하여 정부가 직접 운영하였으나, 생산인력의 수가 감소하면서 컨설팅에 집중한 수입확보를 위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점진적으로 민영화 작업이 진행되었음.
- 현재 정부가 노후화된 일부 건물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90% 이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2007년부터는 완전 독립된 민영화를 계획하고 있음.
- 교육생 분포는 학생 40%, 성인 60% 정도이며, 농업인은 보통 타 직업교육 과정을 수시로 이수하며, 이 과정의 일환 혹은 교육과정 이수 이후 PTC에 와서 교육을 받거나 PTC의 Advanced Course 교육을 받음.

1.3. 덴마크

- 덴마크는 농업인력에 대한 직업교육에서 취농 이후의 계속교육, 지도사업, 시험·연구개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교육·연구사업이 상호관련성을 가지며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이는 덴마크의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이 그 성립부터 농업인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임.
- 덴마크는 국가적인 농업정책에 있어 농업정보사업과 교육훈련사업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은 덴마크 농민연맹(Danish Farmers' Union)과 덴마크 가족농업자연맹(Danish Family Farmers'

Association)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제한적이지만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고, 공공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정부에서 약 50% 정도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실제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의 계획은 농업인 대표와 농업교육훈련 담당자(Agency)로 구성된 각 지역의 농업교육훈련계획위원회에서 수립함.

□ 국가차원의 농업인 교육훈련을 위해 중앙 농무성 내에 농업교육훈련위원회를 설치하여 농무성과 농업인 단체 간의 교육훈련업무를 상호 조정하고, 각각의 농업인 단체 내에 중앙의 관련 부서를 설치하여 그들 조직체의 교육훈련을 관장하고 있음.

□ 한편, 중앙에서 농업교육훈련자문센터(DAAC: Danish Agricultural Advisory Centre)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센터는 국가수준의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영역별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음. 이 센터는 교육훈련과 연구를 연계시켜 생산과 재정관리 시스템 개발, 시범사업 준비, 교재 개발, 재정분석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품목 및 농업경영 분야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농업교육 및 대학(Agricultural Education and College) 및 청년농업 및 4-H(Danish Young Farmers and Danish 4H)등 농업인력 육성 영역도 포함되어 있음 ([그림 1] 참조).

- 농업인 교육훈련과 연구의 연계를 위하여 각 영역별로 충분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으며, 2005년 기준으로 농업교육훈련자문센터의 전문인력 수는 총 481명으로 2004년에 비해 증가되었음([그림 2] 참조).

□ 또한 농업교육훈련자문센터 내에 영역별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외부의 연구사와 교수를 참여시켜 교육훈련담당자들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그림 1. 덴마크 DAAC의 조직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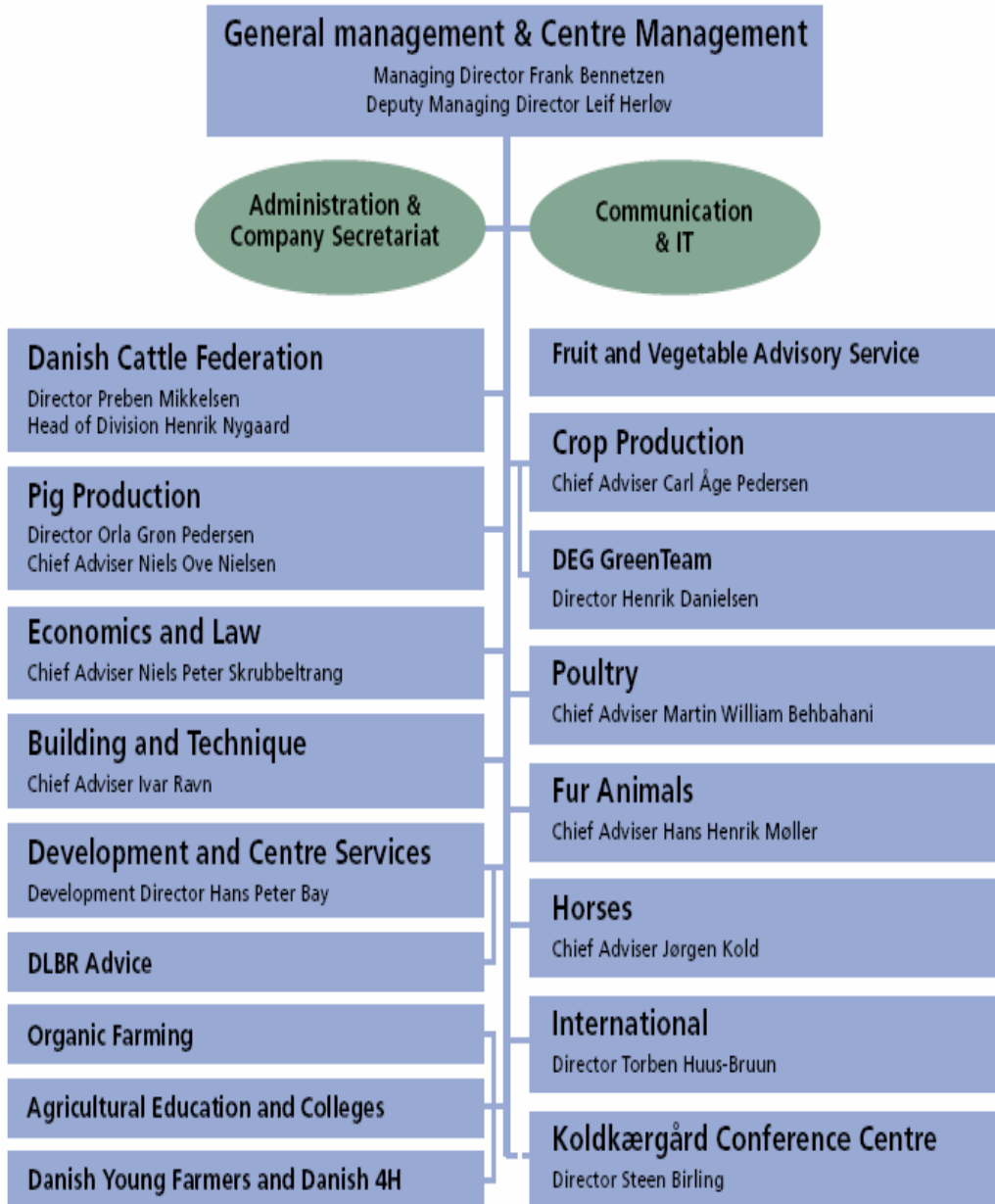


그림 2. 덴마크 DAAC의 인력 현황

	Staff 2005	Staff 2004
Crop Production	66	64
Fruit and Vegetable Advisory Service	16	16
Danish Cattle Federation	88	77
Pig Production	15	15
Horses	14	14
Poultry	17	18
Fur Animals	10	10
Building and Technique	33	27
Economics and Law	71	68
Development and Centre Services	34	32
Communication and IT, including Organic Farming, and Agricultural Education and Colleges	65	61
International	8	11
Joint activities	36	33
Danish Young Farmers and Danish 4H	8	9
National Centre, total	481	455
Part-time freelancers converted into full-time equivalents	10	10

1.4. 독일

- 독일 농업인 교육훈련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 직업교육과 농업인 교육훈련이 연계되어 실시되고 있어 농업계 학교 교사가 농업인 교육훈련도 겸하고 있다는 것임.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천지향적인 농직업교육

이 가능하고, 농업인력의 유인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음.

- 한편 독일은 각 지방정부의 농업환경에 따라 농업인 교육훈련 제도 및 교육 내용이 상이하며 대부분의 교육훈련사업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부담을 갖지 않음.
- 독일의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은 일반적으로 주정부가 재정의 전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와 재정의 대부분을 민간기관에서 부담하고 일부 주정부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주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은 독일 남부, 서부지역이며, 주정부가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의 일부예산만을 지원하는 경우는 중부, 북부, 동부지역임.
- 특히 주정부가 전체 예산을 부담하는 공공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교육조직과 연계하고 있음. 연구교육조직은 연방농업연구소, 농림식량연방연구소, 농업시험장과 같이 농업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조직뿐만 아니라 농업인 교육 전문학교 운영, 농업교육훈련 담당자(Agency) 양성교육연구소도 포함되어 있음.

1.5.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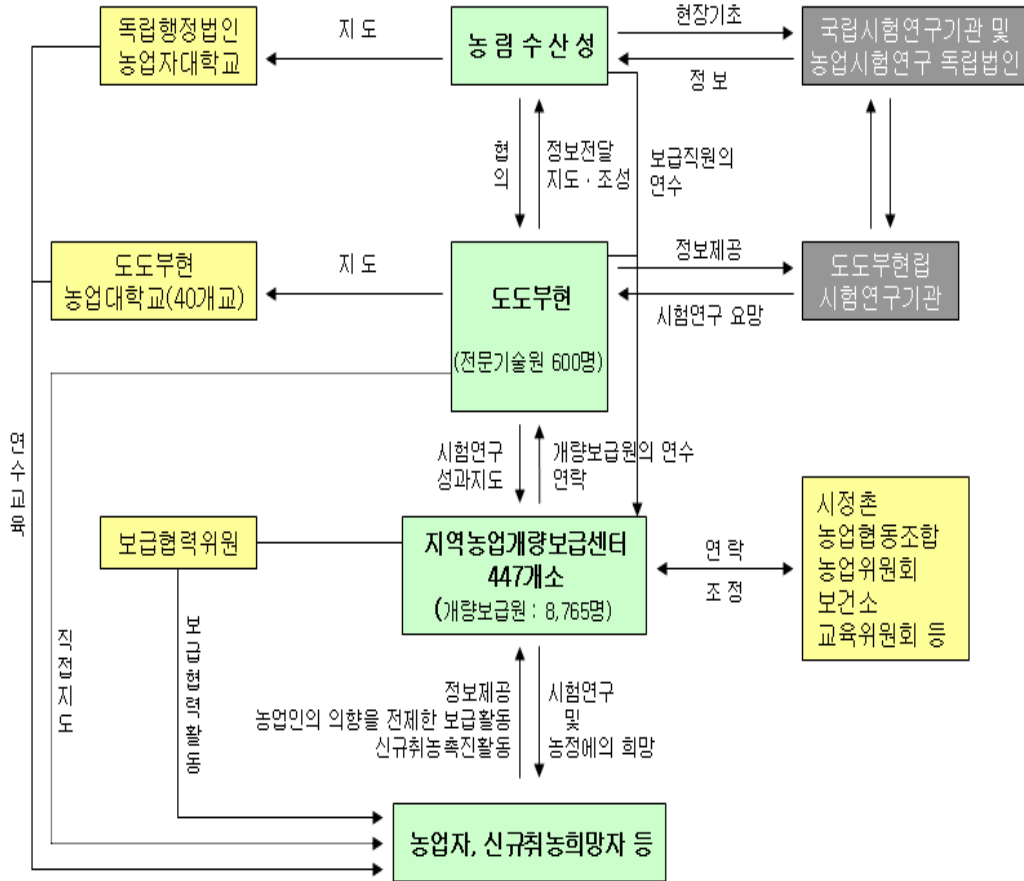
- 영국의 ADAS(Agricultural Development and Advisory Service)를 중심으로 한 교육훈련, 시험연구, 행정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농업인의 재교육 및 농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ADAS는 기존의 NASS(National Agricultural Advisory Service)가 개편된 것으로서 영국 농림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의 하위 기관으로서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1986년부터 민영화가 이루어져 유료화 되었음.

- 농업인 교육훈련은 ADAS의 생산부가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품목별 기술교육과 함께 연구개발 및 조사분석 업무도 담당하고 있음.
- ADAS의 유료서비스로 이루어지는 농업인 재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공공분야 사업으로서 환경, 경관, 동물복지 등이 있고, 이는 여전히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1.6. 일본

- 일본의 농업인 재교육은 농학계 대학 졸업 후 각종 연수를 거쳐 취농한 인력에 대해 청년농업자, 장년농업자, 지역리더로 구분하여 생애적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지속적인 교육의 목적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체 육성에 있음.
- 청년농업자에게는 농업기술 및 경영기초 교육, 장년(중견)농업자에게는 경영기획 및 농업조직화 교육, 마지막으로 지역리더(선진농업자)에게는 경영진단 및 지역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일본의 농업인 교육훈련은 크게 중앙, 도도부현 단위로 이루어지며, 정부가 예산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농업인 재교육은 중앙의 독립행정법인인 농업자대학과 도도부현에 설립된 농업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음. 또한 민간 농업인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일본농업실천학원, 농업영양전문학교, 농업실천대학교 등이 있음([그림 3] 참조).
- 이러한 농업인 재교육은 전통적으로 농촌지도사업과 연계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 일본의 농촌지도조직은 농업행정기구 내에 설치되어 있지만 독립성을 유지하여 교육훈련사업으로 특화·발전하여 왔음.

그림 3. 일본의 농촌지도사업 체계



- 일본의 농업인 교육훈련(협동농업보급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예산을 조달하고 사업을 관장하고 있음.
- 한편 일본의 농촌지도사업은 농림수산성, 도도부현, 농업개량보급센터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민에 대한 지도사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방정부에 속하는 도도부현과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농업개량보급센터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일본은 농업의 시장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전문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을 제정하고 인정농업자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농업경영개선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음.
- 인정농업자 제도란 시정촌의 지역농업 발전방향에 따른 농민의 경영개선계획을 인정하고, 이러한 인정농업자에 대해 경영규모확대 지원, 조세부담 경감, 경영자금 융자, 경영관련 연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그리고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설치한 경영개선지원센터의 목적은 ①지역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이 협조하여 경영감각이 뛰어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의 육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②기존에 설치·운영되어 왔던 구조정책추진회의¹³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임.

표 3. 경영개선지원센터의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전국 경영개선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농업회의소에 설치 - 경영개선 지원활동에 관련된 교육교재 작성, 경영정보 제공, 홍보활동 담당
도도부현 경영개선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진단사, 사회보험노무사, 식품산업, 시장관계자 등의 전문가를 지도상담원으로 등록시켜 시정촌으로부터의 요구에 대응 - 시정촌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인정농업자 등의 경영개선 교류회 등을 개최
시정촌 경영개선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실정에 부응하여 시정촌, 농업위원회, 농협, 농지보유합리화법인 등에서 적절한 기관 또는 단체에 경영개선지원센터 설치 - 인정농업자 등의 경영개선 계획 작성, 연수회 개최, 조직화 활동 등을 지원 - 지역센터의 요청에 따라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며, 전문경영체에 대한 경영개선 지도 및 자문 실시 - 농업경영, 시장유통, 농산가공, 세무, 정보처리, 축산기술, 경종기술 등의 전문가 활동

13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구조정책 추진방안의 수립, 토지이용 조정 등의 업무 수행

1.6. 사례 종합 및 비교

- 미국,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영국, 일본의 농업인 재교육 사례를 운영주체, 운영주체의 민영화 여부, 지원조직, 지원조직의 역할, 정부예산지원 여부에 따라 관련 내용을 종합하면 <표 4>와 같음.
- 미국은 농업인 교육훈련이 각 주립대학에 흡수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앙정부(농무성)·주정부·농업인교육훈련기관(주립대학)이 상호협력적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표 4. 선진국의 농업인 재교육 사례 종합

구분	미국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영국	일본
운영주체	주립대학	DVL PTC+	농업인 단체 (농민연맹, 가족농 업자연맹)	정부 및 민간단체	정부 및 ADAS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Advisory Service)	농업자대학 및 농업대학교
민영화 여부	-	추진중('11년 민영화 완료계획)*PTC+는 민영화 완료	완료	일부지역 민영화	민영화 완료	-
지원조직	농무성의 CSREES 및 ARS	농업지식정보센터 (IKC)	농업교육훈련자 문센터(DAAC)	연구교육조직체	-	농촌지도 조직 (중앙, 도도부현)
지원조직 역할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농업인육성정책 개선	기술개발 연구-교육 연계 농업인 육성 제도혁신 전문인력양성 농업인력육성 조직간 협력 지원	연구-교육연계 교육훈련시스템 관리(시범사업, 교재개발, 재정분석 등) 연구인력, 교수 등의 협력지원	연구·기술 개발 농업인교육전 문학교운영 농업교육훈련 담당자 양성	-	기술개발 교육-지도 연계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여부	일부 지원 (주정부 및 민간단체 일부부담)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주정부의 전체 또는 일부지원	없음	전체지원 (주정부 일부부담)

- 네덜란드 정부는 공공분야 농업인교육훈련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 민영화를 통한 교육훈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단 농업인 교육훈련과 연구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농업지식정보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농업인 교육훈련 전문인력양성, 정책개선, 관련조직간 협력관계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 덴마크는 전통적으로 농업인 단체가 중심이 되어 농업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농업교육훈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에 농업교육훈련자문센터(DAAC)를 설치하여 주요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및 교육훈련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음.
- 독일은 중앙정부의 개입보다는 주정부 차원에서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전체 예산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농업인 교육훈련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교육조직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들 연구교육조직체들은 연구·개발, 농업인교육훈련, 교육훈련전문가 양성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영국은 과거 농림부 산하에 ADAS를 설치하여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을 운영하였으나, 1986년부터 민영화 되어 주로 컨설팅 중심의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일본은 정부와 주정부 중심으로 농업자대학 및 농업대학에서 농업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사업과 연계를 통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을 민간 주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공적 교육훈련사업 및 민간 교육훈련사업에 대해 일부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 농업인 교육훈련과 연구를 연계하고, 교육훈련 시스템의 질 제고를 위해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미국은 정부부처 내에 농업인 교육훈련 지원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 역시 정부가 관리하는 지원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민간기관을 지원하고 있음. 이들 지원조직은 농업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농업인 육성정책·제도 개선, 농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 폭넓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2. 주요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과 정책과제

- 유럽 선진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의 주체를 민영화함으로써 지역 및 품목별 영농현장에서 요구되는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을 적시에 제공하고 있음.
 - 민간 주도의 성장단계별 수요자 맞춤형 농업인 육성 로드맵 및 추진전략 수립
 - 농업인력의 진입, 퇴출 등 중장기적 농가인구의 정확한 변동 예측을 통해 신규농업인력, 중견농업인력, 선진농업인력 등 단계적 정예농업인력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육성정책 방향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민간 중심의 현장밀착형 농업교육훈련으로의 개편을 촉진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의 교육훈련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 모색
 - 농업인들이 영농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요구 파악, 중장기적 교육훈련사업 계획 수립, On/Off-line · Blended learning · 컨설팅 등 다양한 정보제공 채널 구축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기관의 역량 제고를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수립 필요

- ※ 농업인의 성장단계에 따른 생애 단계별 계속 교육훈련 실시(일본)
- ※ 지역별·품목별 PTC+를 중심으로 새로운 농업기술에 대해 현장실습중심의 교육을 실시(네덜란드)하거나 농업인 단체 주도의 농업인 육성사업을 계획·실시(덴마크)하고 정부는 재정지원 및 관리 기능 수행
- ※ 집체식 교육훈련을 지양하고 개별 농가 및 법인에 대한 컨설팅 계약·실시하고, 아울러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수립 컨설팅 병행(영국)

- ※ 정부부처 내에 교육훈련 관련 전문가를 배치하여 정책사업 수립·운영·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덴마크)
- ※ 연구인력, 대학교수 등의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농업인 교육훈련 시스템 관리·개선(덴마크)
- ※ 농학계 대학 및 농업인 교육훈련기관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차원의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개선 및 중장기적 추진방향 수립(미국)

- ※ 별도의 정부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센터(네덜란드) 또는 정부조직 내 협의체(덴마크)를 설치하여 연구-지도-교육의 연계를 지원하고 농업인력개발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정책연구 기능 수행

- ※ 농학계 대학 중심의 농업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지도조직과의 협력체계 구축(미국, 일본)

- 주요 국가들이 효과적인 농업인 교육훈련 정책추진을 위해 정부부처에 교육훈련 전문인력을 확보해 두고 있으며, 정책사업 지원의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관리를 위해 관련 전문가 집단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 농업인 교육훈련 정책 수립·추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부부처 내에 교육훈련 전문인력 확보·배치를 위한 당위성 마련
 - 정부예산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의 질과 책무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시 교육훈련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중장기적인 정부지원 사업계획 수립
 - 1년 단위의 단기적인 농업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로는 농업인 교육훈련의 지속적인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없음. 정부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농업교육훈련 사업의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교육수요가 예상되는 교육훈련 사업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주요 국가들은 농업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영농기술 연구·개발, 농업교육훈련 전문가 육성, 농업교육훈련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포함한 농업인 교육훈련 전문가 양성, 농업인 육성 정책 개선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설립을 통해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
 - 농업인력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범국가적 공감대를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력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사업에 대한 이론과 실체가 접목될 수 있도록 (가칭)농업인력개발전문연구센터를 관련 대학에 설치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 예)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인적자원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내에 ‘인적자원개발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 미국과 일본의 경우 농학계 대학과 농촌지도조직의 연계를 통해 농업교육훈련과 지도사업의 통합적 관점에서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있음.
- 학교 및 공공·민간 기관의 농업교육훈련 사업과 농촌진흥청의 지도사업 등 농업인력개발 행정체계의 일원화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농림부 중심의 농업교육훈련과 농촌진흥청의 지도사업이 동일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함으로써 국가차원의 농업인력개발 체계의 기

들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연구·지도가 연계 또는 통합된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농학계 대학의 교육훈련 및 연구 기능 강화를 통한 교육훈련과 지도사업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참고 문헌

- 나승일. (2007). 농업인력개발 전문가 양성실태 및 개선방안. 한미 FTA 극복을 위한 농업 및 관련 산업 인력개발전문가 육성방안. 2007 한국농업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 농림부. (2006). 농업교육체계 개편 방안.
- 농촌진흥청. (2004). 농업지식정보체계(AKIS) 연구동향에 관한 조사.
- 농촌진흥청. (2005). 시설원예 PTC+에 관한 연수보고서.
- 박문호, 박영구. (2004). 유럽 주요국의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의 동향과 시사점. 농촌경제, 27(2), 87-106.
- 이무하, 나승일. (2005). 농생명 산업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전략. 농생명 사업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산학연 협력기반 조성 전략. 농업과학 2005 심포지엄, 1-47.
- 정철영, 이용환, 나승일. (2002). 국외의 농업인력 정책 분석 및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34(2), 27-48.
- 정철영, 이용환, 나승일. (2002). 국외의 농업인력교육 체제 및 현황 분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4(1), 49-72.
- 최민호. (1995). 농촌지도론: 농촌사회교육적 접근. 서울대학교 출판부.
- 農林水産省. (2007). 農業研修教育の現状と課題.
- 農林水産省. (2007). 農業研修教育体系.
- DLV. (1999). DLV and DLV Agriconsult.
- FAO. (2001). Agricultural and rural extension worldwide: Options for institutional reform in the developing countries.
- FAO & World Bank. (2000). Agricultural knowledge and information system for rural development: Strategic vision and guiding principles. Rome.
- OECD. (1999). Organisation and functioning of the AKS in OECD member countries, Conference of Directors and Representatives of Agricultural Knowledge Systems-AKS.
- Rivera, W. M. & Gustafson, D. J. (1991). Agricultural extension: Worldwide institutional evolution and forces for change. ELSEVIER.
- Swanson, B. E., Farmer, B. J., & Bahal, R. (1989). Current status of agricultural extension worldwide, Paper presented at Global Consultation on Agricultural Extension, Rome: FAO.

종합 토론

- 종합토론
 - 사회자: 박성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자: 박민선 (농협대 교수)
 - 김정희 (농림부 인력정책과 과장)
 - 김태용 (미래회계법인 회계사)
 - 허윤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종합 토론

□ 박성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가 다시 이 모임의 성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농업정책이 정말로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문제인지 하는 것을 파악을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나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했었던가?’ 하는 것을 배우자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연구보다는 아주 큰 방향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 철학, 가치관 이런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작게는 주요 정책분야에 대해서 주요 전략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연구 스케일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는 2년 동안입니다. 지금은 아주 기초적으로써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뒷받침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와 비춰 본 선진국에도 그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또 비교해 보는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선진국 것이 있다면 우리가 모방하려고 하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또 얼마만큼 걸리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 해보는 자리입니다.

발표순서는 제가 먼저 오늘 주제를 좁히자는 의미로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중요한 부분이 정예 농업 인력의 육성 이 쪽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강대구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업인들, 현재 농업인들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 바로 재교육이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나승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로써 실제에 아주 유능한 농업인들, 후계 농업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향하는 전문 농업인을 키우는 농업

대학의 이영석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기르는 인재에 대한 평가, 그 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정희(농림부)

박성재 박사님께서 농업 인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몇 가지 좋은 시사점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인력육성정책은 농정에서 관심이 집중되든 조금 핵심에서 벗어나 있든 늘 농정의 주요한 관심사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농업농촌 종합대책 2003년도에 종합대책을 만들고 FTA대책에 이르는 이 과정에서도 계속 농림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그렇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중 후반 이후로 후계인력에 대한 고갈에 대한 걱정이 가장 주를 이루었던 그래서 인력육성정책 주 관심사였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시기를 정점으로 후계인력 육성사업도 기존 농업인에게 너무 정책지원이 치우쳐진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창업농지원사업이 생기고 그리고 또 창업농지원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후견인사업이라든지 농업 인턴제라든지 여러 가지 창업농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단기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부응해서 후계인력으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종합자금으로 가기 전 단계의 어떤 추가자금의 성격으로 정책지원 프로그램이 2006년도에 신설된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200 억 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농림부에 변화가 생긴 것은 기존 농업인들의 후계인력의 양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농촌 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 인력의 인적자원의 개발, 그 역량의 강화,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농업인력 양성 체계 중에 특히 교육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정책 프로그램의 확충과 시스템의 개편이 있었습니다. 아까 130만 명이라는 연간교육수요 실적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한 50~60만 정도는 연초에 이루어지는 행사위주의 교육이고 사실 내실 있게 추진되는 교육의 실적은 많지 않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공

공부분에 치우쳤던 농업교육의 기능을 민간 쪽으로 축을 이동해가자, 지금 선진국의 어떤 농업교육의 시스템이 발전해 간 궤적을 보고 또 현재 우리 공공부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의 역량이나 새로운 환경변화에서 맞춰가는 그런 시스템의 수준을 보아도 공공부분에 너무 의존하기 보다는 민간 내에 농업인 교육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그쪽에 무게를 실자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숫자의 측면에서 보면 농업 인력의 어떤 양적인 수준에서 보면 후계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에서나 아니면 박성재 박사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연간 만 명의 인력이 농업부문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연령대를 봐도 40대 이하가 연간 한 4,000명 정도면 사실 많은 분들이 강하게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인력 유입이 단절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질적으로 영농 정착율을 높이고 지금 현재는 후계인력 지원사업을 받는 농가가 3년 이상 정착하는 율을 한 85%~90%사이로 봅니다. 3년 정도를 버티면 거의 농업경영의 어떤 것으로 정착하려는 의지와 그리고 또 기반이 어느 정도 잡힌 것으로 봐서 후계인력 육성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면에서 또 지적되는 부분이 과연 그럼 후계인력이 들어와서 충분한 경영을 할 만큼의 농업자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제점에 공감하고 최근에 농림부가 캐치프리지로 내건 맞춤형농정의 기본, 어떤 핵심적인 논리중의 하나도 농업부문의 자원의 세대 간 이양이나 순환입니다. 이것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고령농의 은퇴를 좀 더 촉진하고 지원하게 하는 프로그램, 더 나아가서는 고령농이 은퇴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는데 농림부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전문가들 그리고 또 정책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농업인들과 의견을 수렴하면서 관련정책들을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이 많지만 어제 발표한 FTA 보완대책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농림부가 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정도 일단 하겠습니다.

□ 김태훈 (미래희계법인)

앞으로 예산 투입에서 양적인 것보다 좀 질적인 것에 투자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사료나 이런 부분이 외부강사를 도입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랐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강사료를 제대로 주면 그냥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파워 포인트라든지 교재도 개발하고 필요하면 실습용 교재까지 만들어 가게 되죠. 강의 한 시간을 하기 위해 최소한 서너 시간을 해야지 좋은 강의를 될 수 있습니다. 현실성 있는 그런 강사료로 바뀌어야 합니다.

동일인이 유사교육, 여기저기에서 유사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육 기관이 자기의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교육을 과정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각 교육기관별로, 우리교육 하면 경영교육, 우리 쪽에 가면 화훼 쪽에서도 우리는 난에 대한 교육, 이런 식으로 교육의 전문화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가 재교육하면서 느낀 것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기획 등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의 확보, 아니면 이러한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농업인 등록제라든지 이런 것이 도입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런 농업인에 대해서 성장단계별로 초기 정착단계에서부터 성장단계별로 교육을 전문으로 기획할 수 있는 그런 한 부서라든지 아니면 하나의 기관, 그 정도가 있어야 이런 데이터베이스관리를 잘해서 한정된 우리 예산을 잘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생들의 교육과정의 이력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

니다. 동일인이 중복되게 같은 교육을 받는 문제 등을 막기 위해서는 이력관리 시스템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집단 교육을 저도 많이 하는데, 후계자 교육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후계자 교육을 해 보면 다 잡니다. 한 150명이 있으면 앞에 한 다섯 명 때문에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가 하면 집단 교육식이 업종하고 농업인의 수준을 다 맞춰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축산업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상업하는 사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한군데 모아 놓으면 강사가 초점을 맞출 데가 없습니다. 서로가 재미가 없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집단 교육을 할 때는 농업인의 업종이라든지 생산 작목, 다음에 농업인의 능력, 수준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지금 현장에 와서 지금 느끼는 것은 농업이 영농법인이나 농가 경영체가 커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고용인이 교육에 참석하게 되면 일단 현장에 사람을 비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안 보내려고 합니다. 영농법인이라든지 농가에서 그래서 고용 인력을 교육에 보내시는 농장에 대해서는 해당 농장에 인센티브 같은 것을 제공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서 보면, ‘농업부분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천민이다’라고 그러니까. ‘김 회계사님, 우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다른 직장에 가면 그래도 4대 보험 같은 것 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가입되고 고용 산재도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그런데 해외인력이 들어 올 때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산재가입 안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주가 고유번호나 이런 것을 등록을 해서 산재 가입 해주고 국내에 있는 인력은 아무 것도 가입을 안 해준다. 그래서 국내 인력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농업인으로 인정을 좀 해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업후계자 교육을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 쪽 교육을

하다가 느낀 것인데, 좀 선발을 내실 있게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상법적 권리행사도 못할 그런 아이들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해서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후계농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직장생활을 하다 오신 분들은 상당히 또릿또릿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고나면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절대 안 끝납니다. 오늘도 자꾸 전화가 오고했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사람 비록 인원이 적더라도 4,500명 안되면 어떻습니까, 2,500명이면 어떻습니까, 안되면 4,000명에게 줄 것을 2,000명에게 주고 더 많이 주면 됩니다.

다음에 재교육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에서 경영교육을 앞으로도 강화를 많이 좀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업계 고등학교나 대학과정에 일반 경영학 교수님들 한 두 분 정도가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 농학을 하신 농(農)쪽에서 하신 분이 아니라 경영학을 했던 분, 경영대학 같은데서 경영학과를 전공하신 분이 들어와서 신선한 교류가 좀 있어야 됩니다. 농대하고 일반 학과와의 교류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50억에서 100억씩 매출을 하고 있는 성공한 축산인들은 보면 교육과정에서 남들과 다릅니다. 뭐가 달랐는지 보니까 자기는 농장을 크게 하고 싶어서 대학과정에서 축산학과를 나왔지만 경영학과에 가서 중요 경영학 과목을, 즉 경영학 기초 과목을 스스로 알아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현장에서 한 13년 동안 하다가 느낀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민선(농협대)

저는 발제문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부분보다 보다 굉장히 더 구체적이고 그야말로 미시적인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있어서 제가 어떻게 토론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과제의 방향은 ‘선진국형 농정으로 가기 위한 연구’ 이렇게 되어있어서 미시적인 연구도 중요

하지만 거시적이고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부분도 참 중요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30대 중에 미혼비율이 한 50% 정도가 됩니다. 박성재 박사님이 30대 농가가 7,000농가 정도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 3,500 농가 정도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여성들을 농업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그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농업에 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그래도 안정적인 농가가 재생산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농업 쪽에 친 여성적인 산업으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크게는 노동집약적으로 여자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 여성의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을까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은 법적 지위나 이런 것을 인정받아서 산재도 보험이 되고 또 그런 부분만 잘 되면 외국에서 많은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회사 형태로 가는 장점 중 하나가 가족 노동력으로써의 무보수 가족노동력 이런 부분을 개별 생산자 혹은 개별적인 고용관계를 가진 사람들, 이런 관계가 좀 더 분명하게 되면 앞으로 여자들 혹은 후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노동력에 대한 평가라든지, 투자한 부분에 대한 소득보장, 보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별인력으로서의 보장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농업인력과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농촌 지역에 사회적 일자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창출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적 일자리들을 하는 인력은 주로 여성들이 될 텐데 그런 여성들을 사실 지금 어디서도 길러내는 곳이 사실 없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을 돌본다든지 아

니면 방과 후 교사를 맡는다든지, 농업회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농업 전문학교나 농촌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맡을 수 있는 학과가 됐든 아니면 부전공이 되었던 그런 것을 하면 여학생들도 많이 갈 수 있고 그 여학생들이 후계자로 농촌지역에 들어가서 결혼을 해서 같이 가구를 이루고 살고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야말로 아주 구조적인 문제라 한다면 재교육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도 실제로 농과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대학이 한 80%정도 전 국민이 대학을 가는 시대에 농과계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을 주요 후계인력이라고 보기에 는 대단히 미약한 인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미래 농업 경영주라고 하면 경영주이면서 기술적으로도 갖춰야 되지만 농업 경영인인데 실제로 현실적인 지적수준이나 경영능력의 측면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저도 여성농업인과 관련해서 농업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은 품목별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품목별 교육을 하다보면 이것이 굉장히 지역 특화된, 상당히 지역특화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단위에 불려다가 전문화 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장에 내려가는 교육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품목별 전문화 된 교육 같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의 단위가 조직체, 작목반, 그다음에 지역, 이렇게 되는 교육이 앞으로 중요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 허윤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는 인력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농업 인력육성정책’ 이런 과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농업 경영 인력인 것 같습니다. 농작업에 관련되는 그런 인력들, 그러니까 경영주뿐만 아니고 농·작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인력들을 어떻게 충원해서 농업경영을 잘 해 줄 수 있을 것이냐는 그런 측면더 전체적으로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농업인력 이외에도 농촌의 인력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농업 말고 농업관광이라든지 지역개발에 필요한 인력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정책사업을 이번에 추진함에 있어서 과거와는 달라서 정책이라는 것이 돈을 일방적으로 나누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의 수요라든지 지역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거기에 맞추어서 돈을 주는 지원해주는 이런 식으로 정책 패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 사업별로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을 교육시킨다든지, 지역 공무원들을 교육시킨다든지 또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또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구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의 교육도 상당히 수요가 있고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앞으로는 유료화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교육수요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그 파악된 교육에 의해서 교육이 제공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유료화에 의해서 그것이 형성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냥 해서는 교육이 중복된다든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잔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잘 해결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업대학에 대해 이야기 하신 것 참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만, 아직 무슨 10년밖에 되지 않아서 이것을 평가하기가 아직 시기상조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을 잘 평가 해 보면 앞으로 자영농뿐만 아니라 재교육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시사하는 점이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평가를 통해 자영농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또 재교육의

경우에도 현실적인 수요들을 어떤 교육체제를 가지고 대응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귀촌을 하는 사람과 후계농에 대한 정책은 차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시민 귀농은 규모화 쪽으로 가는 것과는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제 입장은 후계농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양보다는 질적으로 뭔가 새로 농업에 진입하는 사람에게 진입장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이제 영농기반일 수도 있고 어떤 능력적인 측면일 수도 있는데 영농기반이 없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능력적인 측면에서 많은 교육을 요구하고 이런 행동적 교육이나 이런, 정해야 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게끔 해서 영농기반이 없는 어떤 것을 이런 교육이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진입장벽을 넘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한 가지 생각입니다.

지금 민간교육이나 공공농업인 교육이 교육 사업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사업들 있잖습니까, 농업분야의 경제사업, 클러스터 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무언가 교육에 대한 동기화가 그다음에 현장에 적용성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김태훈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분야의 어떤 노하우가 특히 경영 교육 같은 것이 많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농업인 교육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도 민간업체, 특히 대기업에 좋은 교육 시설과 교육 콘텐츠가 있거든요. 농업인 교육훈련 관련해서 많은 인프라가 부족한 특히 인력이나 시설 측면에 이런 민간단체 교육의 노하우와 콘텐츠, 시설들을 같이 연합해서 사용함으로써 대기업 차원에서는 어떤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는 기회도 주고 농업인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서로 win-win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태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예 인력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농업을 끌고 갈 정예인력이 굉장히 필수적인 농업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정예인력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추정치 정도는 나와 있는데 이것이 연간 만 명 정도 정예인력이 아니라 귀농한 사람까지 포함을 해서 연간 만 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정예 인력을 수적으로 어떻게 파악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 같으면 신규 사원, 신규 직원을 채용합니다. 이런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데 신규직원 그것이 정예인력에 해당되는 정예인력의 출발점인데 농업 같으면 아까도 농업고등학교 졸업이 정예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박민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을 졸업해서 바로 농업부분에 취업을 하는 사람, 그것이 정예인력의 양적규모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봤을 때 옛날에 한 번 제가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현대자동차보다 훨씬 더 지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일개의 자동차 회사보다도 오히려 적은 정예인력을 가지고 한국의 잠재적인 농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굉장히 부정적인, 비관적인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정예인력을 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농업에 취업하는 정예인력의 수가 얼마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리고 정예인력에 대해서 육성하는 방법인데, 일본에 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별로 한번 하는 것을 보았는데 국가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개입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리스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설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하우스라든가 예를 들면 논농업이라든가, 일정한 농지 면적을 가지고 한 5년 정도 임대를 해줍니다. 선발할 때는 한 5년 정도의

영농계획서를 가지고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농업 기술센터 같은 곳에서 관리 내지 감시도 하고 평가를 합니다. 5년이 지나고 예를 들면 정예인력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농장을 해당농가에게 매각을 해버립니다. 현장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 경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단지 준다기보다 5년간을 두고 평가를 해서 객관적으로 정예 인력으로서 육성이 가능, 정예 인력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그렇게 매각을 해서 육성을 하는 그런 방식이 상당히 실질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이영석(한국농업대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진입 농가가 과연 정예인력인가 어떤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기반이 없어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급불균형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 쪽은 자원은 있는데 후계할 사람이 없고, 또 한 쪽은 귀농하고 싶는데 기반이 없는 김태곤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 중의 한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이것을 중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는 것, 그런 것 또한 신규 인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1기 모집할 때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일단 대부분 기반이 있었습니다. 일단 후계인력이라 하면 승계할 농장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규취농자는 영농기반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인력을 정예화 해 가는데 영농기반이 없는 학생들을 우리가 뽑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는데 뽑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도 기반 하나도 없이 열심히 해서 20년, 30년 만에 보란 듯이 이렇게 했는데, 농사는 의지가 중요하다. 의지가 중요하니까 영농 기반이 없는 사람도 뽑아라.’ 저도 그때 당시에는 없는 것도 서러운데 입학조차 못하면 말이 되겠느냐 그래서 영농기반이 없는 사람 5%를 뽑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3년 후에 졸업을 해서 자리를 잡는데 엄청 어렵습니다.

교수가 몇 번씩 나가서 사업들을 뛰고 토지를 얻어서 주선을 하니깐 그나마도 겨우 되는 것입니다. 그 뒤부터는 영농기반이 없는 사람을 좀 되도록이면 뽑지 말자는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을 막 구분 없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우리 농업 인력교육이랄까 농업의 인력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는 사람들이 어떤 기본 틀에 합의를 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1, 2년 배우면 할 수 있는 게 농사라는 생각이고 그런가 하면 어디서는 정예 인력이 없다고 해서 대학원, 대학까지 해서 최고 경영대과정인 MBA과정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입니다.

기술지도 쪽은 특히나 민영화되면서 민간업체들도 다 합니다. 신제품 만들면 모아놓고 강의하죠, 새로운 농기계 나오면 농기계회사에 나와서 강의하죠. 농가들은 기술과 관련해서는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경영이고 판매고 회계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고교육, 농대교육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농고교육은 농업 기술자를 양성하는 선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 수정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양성하는 곳, 거기까지 가르치는 곳이 농고다. 그리고 농장주가 되는 경영이나 판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곳이 전문대학이다. 그리고 4년제 대학은 그것을 기획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하는 이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들이 조금 합의를 해야 '우리 이 교육은 이렇게 가지고 갑시다, 저 교육은 저렇게 가지고 갑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교육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생님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면 좋은데, 교수님들이 개인 캐리어

관리 같은 것들 때문에 연구가 자꾸 학문 쪽으로 갑니다. 농고 선생님들도 뭐 발명특허도 해야죠, 연구해야죠, 자꾸 학문 쪽으로 가게 됩니다. 농대 교수님들도 연구해야 되고 발명특허도 해야 되고 논문발표도 해야 되고 연구실적 쌓여야 승진,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농학 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서없이 말씀 드려서 미안합니다.

□ 김정희(농림부)

우선 농업인력 육성이 어떤 목표라는 부분에서 양적인 목표냐, 어떤 질적인 수준의 확보냐 라는 논의는 양도 확보하고 질도 높여야 되는 게 당연한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계인력, 창업농을 저희가 매년 천 명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경쟁률이 한 1.34: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1,300명이면 그 중에 1,000명 정도 뽑힌다는 얘기입니다. 지원에 비해 너무 많이 선발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실무적으로 아주 조심스런 진단이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꼭 천 명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해서 사업량을 줄여가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유지하되 좀 더 나은 자원을 선발하게 하는 노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질적인 부분에서 김태훈 회계사님이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신규농 중에 부모가 가라고 해서 그냥 오는 사람들이 문제인 반면 정말 제 발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FTA가 한 두 개쯤 와도 한동안은 농업 경영으로 먹고살만한 사람들입니다. 외부에서 다른 산업에 종사하며 구조조정의 그런 피 말리는 경쟁을 해본 사람들이 농업부문을 다시 선택했을 때는 굉장히 의외로 비즈니스의 기회가 쉽게 눈에 보이고 그것을 찾아가는 역량도 농업계에서만 계속 있는 사람들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짧은 현장경

힘으로 얻은 결론입니다.

아까 박민선 교수님께서 아주 정확히 지적해주셨는데 수급의 불균형 (miss-match)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계에 자원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고령농가가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십년 후 오년 후 분명히 어떤 구조가 전환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우리가 맞게 되는데 그 자원을 어떻게는 물론 후계농으로서 승계받는 농가도 똑똑한 농가는 경영규모를 넓힐 수 있게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말하자면 인력에게도 그 자원이 배분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느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력 육성의 어떤 양과 질을 다 어떻게 보면 끌고 갈 수 있는 고민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농업 인력의 은퇴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역모기지론 이런 것들도 정책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제가 지금 프로그램으로는 정확하게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후계 인력이 은퇴하는 농가의 농장에서 일정기간 수련을 하고 어느 단계에 가면 이양을 받아서 경영을 하고 아주 장기적인 용자로 상환하고 농가는 남은 여생을 그 농장을 기반으로 해서 돈을 받아서 쓰는 제도가 있습니다. 둘의 중간에 중개하는 역할을 정부가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정부재원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인데, 뭔가 이런 패키지 프로그램들을 구상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농업으로 들어온 농가의 재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방향은 선회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 그동안 교육부분은 정부 정책에서도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위험부담이 큰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성과를 측정할 수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면 무한정 돈이 들어갈 부분이 많은 것이 교육입니다. 사실 농업분야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소극적인 태이 크졌습니다만 딱히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예산을 늘리고 출발을 했는데, 정부 내에서 경영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재원의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원의 확보는 가능해 졌는데, 제대로 쓸데가 없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육을 할, 프로그램을 실행할 사람이 없고 기본적으로 농업부문 내에 교육 콘텐츠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나승일 교수님이 저희에게 제안을 해주시는 전문가 조직의 설립 이를 통해 콘텐츠도 기획 하고 수많은 교육과정들을 평가하고 피드백하고 컨설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훈 회계사님이 말씀해주신 동일인 반복하여 피교육자가 되는 문제는 저희도 인식하고 이에 교육생의 이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춤형농정에 중요한 정책 인프라로써 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체 등록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등록 정보 중에 교육의 어떤 실적, 교육이수 실적이나 컨설팅을 받기위해 노력을 했는지 이런 실적도 어느 정도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봐서 함께 이력관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적어도 창업농이라든지 제대로 정책사업을 통해서 농업부분으로 유입되고 있는 그런 인력들은 그 단계부터, 창업농 단계부터 교육 이력관리를 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갈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강대구(순천대학교)

지금 이제 농업계학생들이 옛날보다 성적이 떨어지고 취업률이 낮아진 것은 농고에 들어가면 장학금을 받고 등록금도 싸고 거기다 자영농고같은 경우는 기숙사비도 면제입니다. 그러니 누가 가느냐? 형편이 어려워 일반 고등학교에 못 갈 아이들이 갑니다. 반면 농가들은 자녀들을 농업계에 보내서 후계자를 육성하는 게 아니라 대학을 보내서 딴 데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영규모가 없는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더 지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잠재농업인을 키우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결국 농업계 고등학교나 농업대학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업하는 데는 농고선생님들도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바로 자영하러 가기에는 조금 연령상으로도 어렵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들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3년을 하는 동안에, 1학년 때부터 훈련을 합니다. 1학년 말쯤에 프로젝트 제안을 받아 그 중에 괜찮은 것에 학교 농장을 빌려주고 관리자금도 줍니다. 1, 2년 뒤에는 성과가 나옵니다. 그럼 그 중에 흥미 있는 아이들이 나타날 것이고 계속 하겠다는 아이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좀 더 자신 있게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시겠지만 여주농고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그런 과제를 해서 장학금을 주니까, 땅을 빌려주니까, 그 중에 자기 돈을 들여서 사지만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애들이 나옵니다.

□ 나승일(서울대학교)

오늘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볼 때는 잘 취합하면 좋은 정책과제들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두 가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면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농림부가 그동안 농업인력 후계인력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농업인력 내지는 후계인력에 대해 접근할 때 단지 생산인력만을 보지 말고 전체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농업의 비중이 점점 축소되어가고 종사자도 적어져가는 과정에 있지만, 농학계 학교들이 있어 적어도 농업에 대한 이해나 농촌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농업이나 농촌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영농종사 여부만 가지고 농학계 학교를 평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등학교는 전문계 고등학교나 농고가 있지만 옛날 70년대, 60년대와는 교

육 목표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학교수준별 양성하는 인력수준을 고등학교는 기능인, 전문대학은 테크니컬, 4년제 대학은 엔지니어 등으로 구분하여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왔는데, 이로 인하여 낮은 수준의 학교에서 양성되는 인력이 무조건 질이 떨어진다는 편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학계 학교를 졸업하면 무조건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는 인식도 이제는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대학은 영원히 4년제 대학보다 못하다는 잘못된 인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농업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 맞는 일반교육을 하면서 농업에 대한 내용을 더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농고에 다닌 후 개인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더 공부하여 고급 농업인력 및 농업관련직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학교 수준에 따른 인력의 교육 목표를 딱 고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과히 좋지 않은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 김태용(미래회계법인)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선진국형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의 한 분야로 지금 농업 인력육성 정책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건데요. 오늘 시간상 농업 인력을 생산인력에 집중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이 지금 나 교수님이 지적하신 농업분야의 브레인들, 그러니까 **농업 경영자를 지원할 수 있는 브레인과 그 전문 인력에의 육성에 있어서 어느 것부터 신경을 쓴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책부재인 이 영역을 농림부가 앞으로 채워나가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축산부문의 양돈, 지금 생산성이 계속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이 축사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과 진단, 이것을 할 전문가가 없습니다. 축산학과를 나와서 다 사료회사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육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양돈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생겼는데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이영석(한국농업대학)

독일 같은 곳의 200ha, 300ha 농장에 가보면, 농장주가 직업학교밖에 안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직업학교라고 하면 10년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초등학교 4년, 실업학교 3년, 실업고등학교 2년, 이런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술보급사업의 일환인 추수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등학교면 벌써 12년의 학교교육을 받고, 대학까지 나오면 16년의 교육받아서 불과 1~2ha 짜리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15년이나 16년을 가르쳐서 농장주를 양성하는 것과, 우리보다 몇 배 큰 농장을 세계적인 수준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9~10년의 직업학교 교육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추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하고 어느 시스템이 더 좋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너무 많이 가르치는 것도 낭비지만, 너무 적게 가르치면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 어디에서 우리가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박성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제야 토의의 열기가 오르는데 끊으려니 아쉽습니다. 지금 이것은 1차 토론회고 보다 세밀한 주제는 장차 있을 2차 세부 토론회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때 또 도와달라고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간단히 제가 받은 느낌을 말씀드리면 생각한 것 보다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인력문제에 대해서 합의하는데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상당히 많이 가까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선진사회의 특징을 경제학적으로 보면 분업화 정도가 굉장히 발달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농업도 마찬가지로

지로 분업화 정도가 발달된 것이 선진농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농업이 빠져 있고 전문화가 안 되고 분업화가 안 되어 있고 무슨 일을 하려고 보면 꼭 어디 중간에 사람이 꼭꼭 빠져서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요 그것을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세계화라는 것이 중요한 화두로 돌아옵니다만 농업도 세계화 속에 간다고 하면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 필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든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전문가, 기술자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 어디서든 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산업이 농업과 금융업이라고 들었거든요. 금융이 깨져 나왔고 깨진 덕분에 지금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금융 산업이 되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농업도 마찬가지로 하시는데 금융 산업을 빨리 일으키게 한 것 중의 하나가 외국 금융기관에 근무했거나 국제기업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모두 분위기 파악을 하자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만 저에게 현장의 농업 지도자가 하신 이야기입니다. 제발 좀 잘난 척 하지마라, 전망이 없다 농촌이 답답하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농업도 희망도 있고 충분히 농촌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찾아서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앉아서 매일 하는 이야기가 비관적이어서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시각을 바꾸고 희망이 생겨야 사람이 보일 텐데 아직은 계속 우리가 악순환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해주신 것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다시 같이 토론할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자료 D234-10

농업인력정책의 문제와 과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7. 12.

발 행 2007. 12.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문원사

02-739-3911~5 <http://www.munwonsa@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